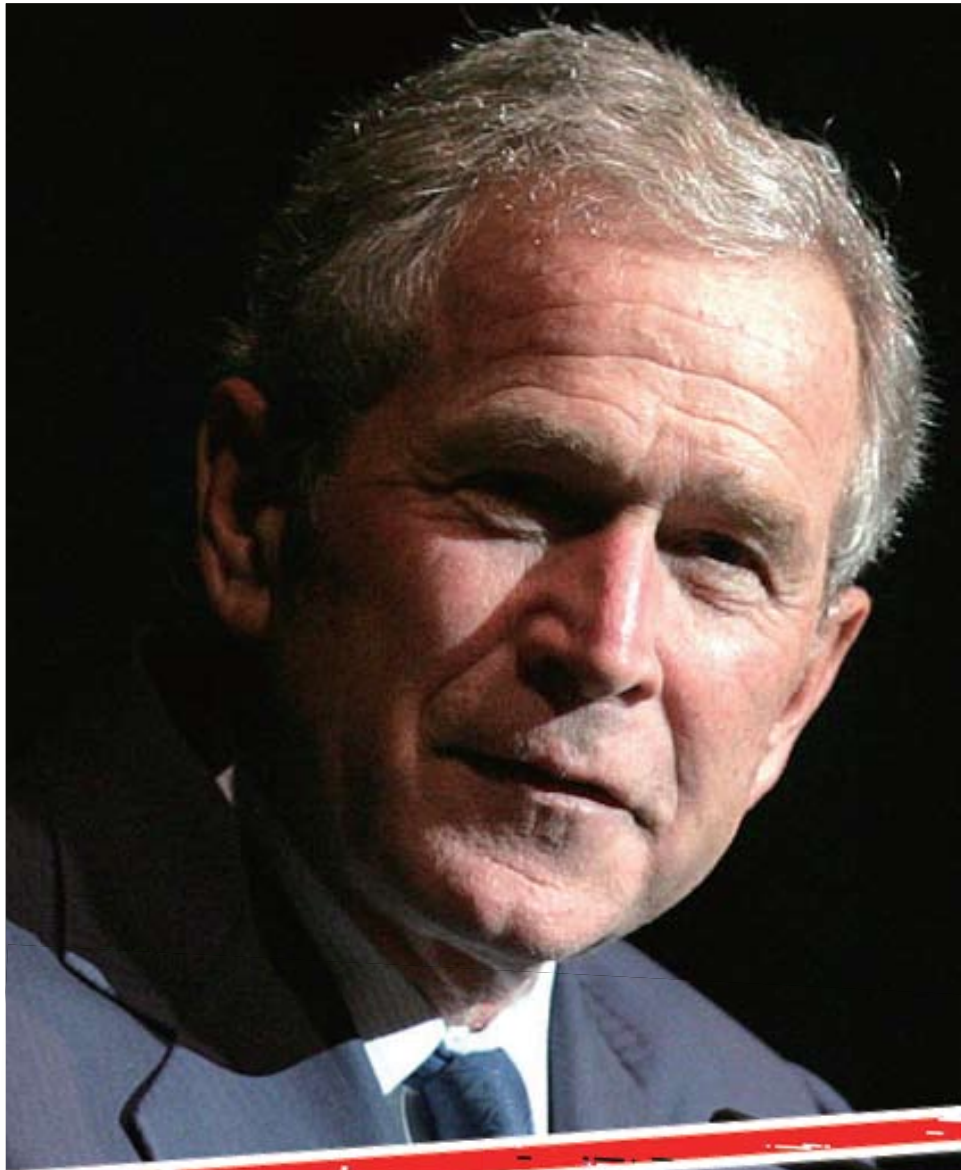


Left21.com

제56호 | 2011년 5월 7일 ~ 5월 20일 | 값 1,800원

리포트21

빈 라덴을 죽이고 기뻐하는



전쟁광·위선자들

수십만 명 학살 | 전쟁을 통해 테러 확산 | 이라크·아프가니스탄 파괴

» 관련기사 4~5면

버락 오바마, 데이비드 캐머런과 기타 서방 정상들은 빈 라덴을 죽이고 전 세계적 테러 공격의 근원을 제거했다고 자축했다.

그러나 그들은 위선자들이다.

먼저, 서방 전쟁광들이 지난 10년 동안 죽인 사람들의 숫자를 보라. 그들이 초래한 고통과 파괴를 보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수십만 명이 죽었고 수백만 명이 집을 잃고 난민이 됐다.

지금도 서방의 공격으로 리비아에서 사람들이 죽고 있다. 미국 정부는 자신이 전 세계를 침략하고 폭격할 권리가 있고 아무도 이 점에 의문을 제기하면 안 된다고 믿는다.

미국 정부는 사실상의 납치 행위를 저

질렀다. 그들은 사람들을 잡아 비밀 감옥으로 이송했다. 많은 수감자가 미국 요원들에게 끔찍한 고문을 당했다. 지금도 관타나모 수용소에는 1백72명이 수감돼 있다.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다.

빈 라덴 암살 과정에서 미군은 허락도 받지 않고 남의 나라 영공을 침범했고 사전 경고도 없이 암살 작전을 벌였다. 어떤 나라가 조지 부시를 죽이려고 그의 텍사스 농장으로 헬리콥터를 파견했다고 생각해 보라. 미국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서방 지도자들은 테러와 9·11 공격 같은 '악마'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

러나 저들이 성토하는 테러 행위들은 억압에 대한 왜곡된 반응이었다.

빈 라덴과 추종자들은 미국 제국주의 영향 아래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을 말하곤 했다.

조지 부시는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 지배자들이 전 세계 패권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가리는 연막이었을 뿐이다.

부시는 이른바 '악의 축' — 이란, 이라크, 북한 — 을 지목하며 이 나라들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사우디아라비아, 튀니지, 이집트나 바레인 같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지만 동시에 잔혹한 독재 정권이 통치하는 나라들은 언급하지 않았다.

버락 오바마는 당선 후 '테러와의 전쟁'을 지속했다.

오바마는 빈 라덴 암살을 계기로 전 세계에 메시지 — '오직 미국만이 세계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 — 를 보내고 싶어한다.

그러나 빈 라덴이 죽었다 해서 세상이 더 안전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자신감을 얻은 미국 정부가 더 많은 전쟁을 벌이면서 자신의 국제적 위상을 더 강화하려 할 수 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은 경제 위기로 타격을 입었다. 또, 북아프리카와 중동을 휩쓰는 혁명 물결을 보면서 패닉 상태에 빠졌다.

엄청난 국가 탄압에도 수백만 명이 시

위를 벌이고 대규모 파업을 벌였고 사병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튀니지와 이집트에서는 이런 투쟁으로 독재자 벤 알리와 무바라크가 쫓겨났다.

이 혁명들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심화하고 있다. 이 혁명들은 민중이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시작할 때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잘 보여 줬다.

이것이아말로 이 지역에서 미국 제국주의의 영향력에 도전할 수 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역대 미국 대통령의 후원을 받는 지역 독재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전쟁, 빈곤과 억압으로 고통받아왔다.

그러나 세상은 변하고 있다. 민중이 일어섰다. 그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미래를 만들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누구의말알아요?

“카다피와 무사 쿠사(전 리비아 외무장관)는 대테러 작전에 있어 좋은 파트너였다.”

카다피와 미국의 절친 관계를 고백하는 CIA 전 국장 헤이든

“그는 미국 정부와 미국의 가치, 국민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 천성적으로 미국의 모든 것에 동조적”

골수까지 친미라며 반기문을 칭찬하는 전 주한미대사 버사버우

“나와 악수를 하면 결혼을 잘하고 사업이 잘 된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명박 혼자만 아는 소문

“[국회의원] 뼈찌를 달아서 국민에 대한 존경을 다시 느끼고자 합니다. 이 뼈찌 제가 결코 떼지 않을 겁니다. 제가 혹시라도 료싸롱에 가는 일이 있으면 그때는 뼈아 되겠죠.”

손학규, 당선 다음 날 민주당 의원총회

“야4당 정책연합 합의문 내용은 ... KTX가 용산역을 출발해서 서대전역을 지나고 있는데 용산역에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식의 내용도 있다.”

박지원, 표 먹고 오리발?

“튼튼한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견제해 나가는 일종의 경영참여조직”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정연수의 새로운 노동조합

“상수형 덕택에 이 험한 세상 살면서 웃을 수 있었는데 이 건 아니잖아.”

안상수의 대표 사퇴를 비꼬는 네티즌들

“마음대로 개인의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게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고요.”

전교조 마녀사냥하던 조전혁이 대통령 측근의 정치 개입을 옹호하며

“머리를 갈아 버리겠다.”

롯데손해보험빌딩 관리 소장, 노조 조합원이 ‘남행열차’를 흥얼거리며 청소한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6·15 청학연대 탄압

마녀사냥으로 위기를 벗어나려는 이명박

4·27 재보궐 선거에서 집권당이 참패를 기록하고 일주일 만에 공안당국이 다시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의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국정원과 보안수사대는 6·15청년학생연대 김호 집행위원장을 비롯해 활동가 네 명을 체포하고, 서울, 광주, 제주 등 회원자택 아홉 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6·15청년학생연대에 대한 탄압이 다른 연관 단체들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번에 체포된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구성’ 혐의, 북한을 방문해 북한 인사와 교류하고 일본 조총련 계열 단체들과 메일을 주고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김 집행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했다는 시점은 지난 정부



5월 4일 '선거 참패 보복 — 공안 탄압 규탄' 기자회견

때였고, 노무현 정부 동안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기도 했다. 위키리크스 폭로를 보면, 이명박 정부도 남북정상회담을 시도한 바 있

다. 대통령과 정부 고위 관료들은 북한을 방문해 ‘회합·통신’해도 되고, 남한의 민중운동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은 이중잣대다.

공안당국은 북한 지지 입장이 대중에게 인기 없다는 사실을 이용해, 주로 북한과 연계나 친북적 주장을 문제 삼아 정권에 비판적

신정호 기자

보험료 ‘폭탄’을 그냥 맞을 수도 있어야 한다?

4월 23일 ‘2011년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이명박은 “심심 복지”를 피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대중적 복지 확대 요구를 일축했다.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우려된다며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올리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에 올해 건강보험료를 5.9퍼센트나 인상했다.

지난 4월 25일에는 노동자 수백만 명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았다. 임금은 쥐꼬리만큼 올려놓고 물가 폭탄에 보험료 폭탄으로 되레 더 빼앗아 가고 있는 것

이다. 정부는 노동자들에게는 지난해 임금에 오른만큼 보험료도 더 내라며 사후정산에 들어갔지만 정작 법으로 정한 국고지원은 5조 원이나 떼어먹었다.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런데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에서 활동하는 이진석 교수 등은 보험료 인상에 대한 반발에 공감하면서도 보험료 인상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듯한 주장을 폈다.

그는 얼마 전 〈프레시안〉인터

뷰에서 보험료를 올리지 말고 국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고 지원을 늘리면 다른 복지는 어떻게 하나’며 반론을 폈다.

이 교수는 프랑스의 무상의료는 “국고 지원이 아니라 종합소득을 기본으로 한 종합세”로 운영된다며 국고 지원 확대 요구를 꺾아 내리려 한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40퍼센트를 차지하는 보험료는 기업주가 95퍼센트 정도를 부담한다.

건강보험 재정의 나머지 40퍼센트를 차지하는 사회보장목적

세도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 대기업은 추가로 특별세를 내도록 돼 있다.

다른 복지 재원이 부족해질까 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궤변이다. 그럼 빈민들이나 장애인들이 국고 지원을 요구하는 것을 반대해야 할까?

이런 잘못된 주장은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올려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자는 시민회의의 주장에서 비롯한 것이다. 시민회의를 주도하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도 성명을 내 “재정 적자를 메우는 데 매몰된 건강보험료

인 진보진영 내 소수 단체들을 마녀사냥한다.

하지만 북한을 어떻게 보든 그것은 토론할 문제일 뿐, 처벌받고 감옥에 가야 할 문제가 아니다. ‘나는 당시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그 말을 할 권리를 사수하고자 한다’는 볼테르의 정신에서 배워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마녀사냥은 단지 탄압받는 당사자만이 아니라 전체 진보운동의 위축을 노린 것이다.

선거에서 패배하고 더 깊은 레임덕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된 이명박 정부는 반민주적인 탄압의 유혹을 느끼고 있다. 정부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며 진보적 활동가들을 마녀사냥하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

최미진

전쟁 이용 돈벌이 기업을 허가해 준 한국 정부

미국의 민간 군수기업 ‘블랙위터’가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며 악명을 떨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민간 군수기업도 중동에서 활개를 칠 태세다. 한국군 파병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민간 군수기업이 진출을 시작한 것이다.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블렛케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아프가니스탄에서 경호 업무를 시작한 민간 군사기업이다.

중동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블렛케이의 핵심 업무는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 기지를 방호하는 것이다. 블렛케이의 전투 행위뿐 아니라 병참지원, 훈련지도, 정찰, 정보전 대행 등의 업무까지 수행

한다. 그리고 태화산업개발의 발전소 공사현장 경비, 보안업체 아실칸(Asilkhan)의 훈련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민간 군사업체들을 파헤친 저널리스트 켄 실버스타인의 폭로를 보면, 민간 군사업체는 세 부류로 나뉜다. 실전 참여를 포함해 전술적 군수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경비 업체’, 퇴역 군 지휘관들이 중심이 돼 전투 상황에 대한 전략적 자문과 군사훈련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군사 자문 업체’, 정규 군대가 전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각종 군수 물자 지원과 정보 수집, 기타 군부대 주둔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군수 지

원 업체’가 그것이다.

블렛케이에 이 세 가지 업무를 망라하고 있는 셈이다. 블렛케이에는 이라크에서 민간인 학살에도 참여한 악명높은 블랙위터와도 공식적으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여군다나 블렛케이에는 ‘국내 최고의 무장토발시큐어리티 서비스 제공업체’라는 이름으로 웹사이트까지 운영하면서 중동을 누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들의 “비즈니스 영역”은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등이다.

한국 정부의 인허가가 없었다면 이들이 이렇게 활개칠 기회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경찰청이 인허가를 해 줬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의 민간 군수업체들과, 5년여 동안 미 국방부와 맺은 계약이 무려 3천억 달러에 이른다.

블렛케이 대표는 〈한겨레〉인터뷰에서 “미국의 경우 실제로 민간 군수기업이 정규군의 군사교육을 맡기도 한다”며 “블렛케이 같은 기업을 자원외교 등에 활용한다면 정치적 부담도 없고 상대 국가도 만족시켜줄 수 있으리라 고 확신”한다고 의기양양하게 공표하기까지 했다.

전쟁과 점령을 통해 이윤을 얻는 이런 야만적인 기업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한국의 반전평화 운동이 쏘하기를 박아야 한다.

김어진 반전평화연대(준) 공동간사

서울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매주 월·금 저녁 7~8시

강남역 8번 출구 ABC뉴욕제과 앞
신촌역 3번 출구 맥도날드 앞
홍대입구역 8번 출구
혜화역 4번 출구
명동 명동 예술극장 앞
건대입구역 5번 출구 건대편 롯데백화점 앞

서점에서도
레프트21을 살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서울대앞), 인서점(건국대 앞), 풀무질(성균관대앞), 이음책방(대 학교),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역촌), 동방서림(울산 현대차 공장 앞)

《레프트21》온라인

《레프트21》트위터를
필로우해 주세요. @left21twit

《레프트21》페이스북의
팬이 돼 주세요. bit.ly/left21fan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www.left21.com

레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구독 신청: 02-777-2792
www.left21.com

여러분의 정기구독과 후원으로 지난 2년 동안 기업 광고 전혀 없이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26개 호) 5만 원 | 2년 (52개 호) 10만 원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하나은행 296-910007-15804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우리은행 1005-301-422382 / 신한은행 140-008-401399 /
농협 301-0010-1643-71

● 구독 기간 중에 구독료나 우편료가 올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레프트21에서 만난 진실을 널리 전하고 싶다면, 한 부를 더 구입해 주위에 소개해 주세요. 자본과 권력에 맞선 저항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길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진보대통합이어선 안 된다

4·27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자세한 선거 평가는 <레프트21> 웹사이트를 보시오)한 후 이명박 정부의 위기는 심화하고 있다. 이번 패배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참패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위기감 속에 우파의 분열은 커지고 있다.

민주당과 진보정당들이 손을 잡은 ‘야권연대’를 통해 한나라당 후보들을 떨어뜨린 이번 선거 결과는 모순된 영향을 미칠 듯하다.

우선, 이명박의 선거 참패와 위기를 보면서 노동자들의 사기가 높아질 것이다. 이것은 이번 메이데이 집회에서도 드러났다. 한국노총 집회에는 무려 15만여 명이 참가했고, 민주노총의 서울 집회에서는 오랜만에 경찰 저지를 뚫고 행진도 했다. 행진 대열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표정에서도 기대와 흥분을 느낄 수 있었다.

한편, 이번 선거 결과는 투쟁 건설보다는 야권연대를 더 강화해서 투표와 선거로 이명박을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더 키우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야권연대의 정당성에 대해 어떤 의문도 망설임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예 야권연대를 넘어서 야권 단일정당을 만들자는 민주당 이인영과 ‘국민의 명령’ 문성근 등의 목소리도 다시 힘을 얻기 시작했다. 진보신당 대통령 합파가 중심인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도 복지국가 강령을 중심으로 야권 단일정당을 만들자고 주장한다.

계급정치 포기

이 단체 공동대표인 진보신당 박용진 부대표는 진보정당의 독자성과 진보의 가치를 고수하는 것은 “낡은 진보”라고 폄하한다. 진보정당과 자본가 정당의 차이가 “작은 차이”일 뿐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지난 10년 넘게 어렵게 건설해 온 진보정당을 없애자는 말과 같다. 사회진보연대의 비판처럼 이것은 “노동자 계급정치의 포기”라고 할 만하다. 그래서 야권연대를 주장하는 진보 인사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야권 단일정당론은 지지하지 않는다.

그런데 선거에서 표의 논리에만 갇혀 있는 야권연대론이 바로 야권 단일정당론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봐야 한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진정성 있는’ 야권연



한EU FTA 처리 반대 농성중인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악수하는 손학규 그 후 손학규와 민주당은 한EU FTA 처리를 사실상 방조했다.

대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아예 당을 합쳐야 한다는 논리가 독세하게 되는 것이다. ‘연립정부도 되는데 단일정당은 왜 안 되냐’는 것이다.

이처럼 야권연대의 논리는 진보정당의 독자성과 진보의 가치를 훼손할 수밖에 없다. 물론 지금 반MB 대중 정서가 야권연대로 대개 수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대중의 급진화와 자신감 회복이 아직 민주당을 뛰어넘어서 당장 행동에 나설 만큼은 아닌데다가 노동자 투쟁이 그런 세력 관계를 뒤흔들 만큼 활발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에서 야권연대 후보에 대한 비판적 투표조차 한 사코 반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지도부처럼 “받은 계급투표에, 머리는 야권연대에” 둘 수 있다며 민주당과 일관된 계급연합을 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진보정당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며 진보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명예, 자존심, 다 버릴 수 있다. … [그러나] 진보의 정책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미 진보정

당들은 이번 선거에서도 민주당과 연합하기 위해 일부 진보 정책들을 포기했다. FTA ‘폐기’와 고리원전 1호기 ‘폐쇄’가 ‘안전선 검증’으로 바뀐 것이 대표적이다.

나아가 진보정당들이 반자본주의·반제국주의 가치를 버리고 더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예컨대 진중권은 최근 “1917년 러시아 혁명의 향수, 1930년대 민중해방운동의 추억으로 먹고사는 것도 진보라 할 수 있을까?”라며 “대중이 지지할 만한 형태로 진보와 정당을 리디자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규환의 비판처럼 “좌파적 신념은 접고 … 주류 사회에서 편히 살기로 한 사람들이 … ‘내가 달라졌다’고 말하지 않고 ‘세상이 달라졌다’고 하며 진보의 가치를 공격하는 것이다.

한EU FTA 아합

야권연대로는 진정으로 이명박을 저지하기도 힘들다. 당장 한EU FTA 관련 진통이 그것을 보여 줬다. 민주당은 야당과 ‘한EU FTA 비준 지지’를 합의해 놓고는 재보선이 끝나자마자 한나라당과 한

EU FTA 비준안 처리를 합의해 버렸다.

진보정당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민주당 박지원은 “야당 정책연합 합의문을 어제 서야 됐다”며 “합의문은 굉장히 좋긴 하지만, 우리에게선 현실이 있다”고 했다.

결국 국회 농성을 불사한 진보정당들을 의식해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합의를 번복했지만,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를 막지는 않았다. 사실상 묵인한 것이다.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이미 민주당은 재보선 전에도 진보정당과 ‘부자 감세 반대’를 합의해 놓고는 한나라당의 취

득세 인하를 합의해 준 바 있다.

그리고 이것은 야권연대가 이명박에 맞서는 투쟁의 발목을 잡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자본가 계급에 기반해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민주당은 노동자 투쟁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손학규가 “노동이 존중되는 세상”을 말하는 동안에도 전북에서 민주당 지방정부는 전북 버스 노동자들의 파업을 짓밟고 있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이런 민주당을 폭로하며 비판하지도 않았다.

김문성

이렇게 생각한다

밀실 협상을 중단하고 논의를 개방해야 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진보대통합에 대해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민주노동당 창당과 국회 진출 때처럼 큰 기대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이미 진보정당 분열 등의 과정에서 실망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이명박의 정치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진보정당이 단결하면서 선명한 좌파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높이고 투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보대통합은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자주파나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주도 속에 민주당과 손잡으려고 진보정당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며 진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당 강령에서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려는 것도 이것의 연장이다.

이처럼 우파적 사회민주주의 정당을 만들어 민주대연합의 부속물로 만들려

는 것은 그야말로 ‘낡은’ 것이다. 유럽에서도 이런 우파적 시민당들이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에 굴복하고 자본가 정당과 연립정부 등 계급타협을 추구하다가 몰락한 바 있다. 근래 유럽에서 신나찌가 득세하는 것도 이런 우파 시민당들의 배신이 낳은 환멸과 냉소가 배경이 됐다.

그런데 유럽보다도 모순과 갈등이 더 심각한 이 나라에서 이런 낡은 과거를 반복하려는 것은 정말 유감이다. 이것은 이를 주도하고 있는 정성희 민주노동당 진보대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이 말끝마다 강조하는 “감동”은커녕 환멸만 남길 것이다.

좌파 배제

우경화 프로젝트 추진 세력은 그것에 반대할 것이 명백한 급진좌파들을 진보대통합 논의에서 배제하려 한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도 메이데이 연설에서 진보대통합을 의도대로 빨리 완수하기 위해 “모난 것이 있으면 깎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현재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다함께의 참가 신청을 계속 보류하고 있다. 연석회의를 주도하는 쪽에서 ‘반자본주의 단체는 안 된다’며 가로막고 있다고 한다. 현재의 진보대통합을 뒷받침하는 ‘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제안하는 ‘노동자 모임’에서도 좌파적 노조 활동가들은 포함돼 있지 않다.

좌파를 배제한 채 밀실 논의를 통해 우경화를 밀어붙이려는 것이다. 반면 진보연대는 선거 때마다 민주당과 거래를 중재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새로운 상설연대체인 ‘민중의 힘(준)’이 출범했는데도 진보연대를 없애지 않는 것은 이런 구실을 탈기기 위해서인 듯하다.

이런 우려스러운 경향은 4·27 재보선을 전후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연석회의에서 진보신당과 사회당에게 “시간이 얼마 없다”며 조속한 합의를 강요하고 있다.



‘패권주의를 반성한다’면서 바뀔 게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반발과 불협화음만 커지고 있다. 당장 4월에 발표하기로 한 3차 합의문 조율에 실패했고 진보신당 독자파와 사회당은 ‘새로운 노동자 정당 추진 위원회(준)’를 출범시키며 다른 길을 향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동안 유감스럽게도 잘못된 프로젝트를 추수해 왔던 ‘진보정치세력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 모임’의 김세균 교수도 위기감을 느껴 사회진보연대를 연석회의의 참관 단체로 끌어들이며 균형을 맞추려 하고 있다. 하지만 뭔가 바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급진좌파들은 진보대통합 프

로젝트가 이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나가지 않도록 힘을 모아서 개입해서 한다. 진보대통합이 결국 진보정당을 우경화시키며 민주대연합의 부속물로 만들 것이라고 체념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개입해서 그것을 막아야 한다. ‘민중의 힘’ 출범 과정에서 급진좌파들이 공동 개입해서 “민주당 등 신자유주의 세력과 계급연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반영했던 것처럼 말이다.

급진좌파의 개입으로 진보대통합이 급진적 대안을 제시하며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을 고무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설사 실패하더라도 우경화 프로젝트의 실체를 드러내는 성과라도 남길 수 있다.

오사마 빈 라덴 — 미국 제국주의의 친구에서 적으로

오사마 빈 라덴은 종종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의 벙커에 숨어 전 세계 테러 활동을 ‘총지휘’하는 것처럼 그려질 때가 있었다. 이것은 빈 라덴의 적뿐 아니라 빈 라덴 자신도 만족한 신화였다.

2001년 9·11 테러 당시 뉴욕과 워싱턴을 공격한 것은 알카에다였다. 그러나 알카에다는 꼭 짜인 조직이 아니다. 지난 10년 동안 더 느슨해졌다.

중동에서 갈수록 많은 사람이 서방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길 원하면서 빈 라덴에 대한 지지도 늘었다. 미국 정부는 빈 라덴이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겨우 60킬로미터 떨어진 병영 도시인 아보타바드의 한 저택에서 죽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빈 라덴이 파키스탄 군부 고위 인사의 지원을 받았음을 암시한다.

사실, 빈 라덴은 오랫동안 미국의 동맹이었다.

오사마 빈 라덴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예멘 출신 부동산 백만장자였고 사우디아라비아 왕실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가문이었다.

빈 라덴은 1980년대 러시아군의 아프가니스탄 점령에 맞선 싸움에서 미국 정부와 손을 잡았다. 그는 ‘공산주의자들’이 무슬림 국가를 침략한 데 분노했다.

CIA는 파키스탄 군정보국(ISI)을 통해 빈 라덴에게 자금을 전달했다. 1992년까지 아프가니스탄인 10만 명이 이 자금으로 훈련을 받았다.

빈 라덴은 이슬람의 한 형태인 와하비주의를 확산시키려는 사우디아라비아 국가 계획에 보조를 맞췄다. 이것은 다른 게릴라 운동 지도자들의 영향력을 잠식했다. 그러나 이 운동은 서방 국가의 이해관계에서 독립적이지 못했다.

CIA는 아프가니스탄 저항세력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집단과 흔쾌히 동맹을 맺었다.

CIA

빈 라덴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정부의 자금과 자기 재산으로 무기를 사고 아랍인 전사들을 데려왔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보고서를 보면, 1990년 아랍인 부대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로 돌아왔을 때 그는 소련이라는 “초강대국을 무너뜨린” 영웅으로 불렸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략했을 때 빈 라덴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싸운 자신의 무자헤딘 전사들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방어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은 이 제안을 거절했고 미군의 보호를 요청했다.

빈 라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군 보호에 의존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비무슬림 군대가 이슬람 성지에 주둔하는 것에 반대했다.

그가 사우디아라비아 왕가를 비난하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그의 입을 다물게 만들려 했다.

빈 라덴은 1992년 수단으로 떠나야 했고 1996년 아프가니스탄으로 되돌아갔다. 1997년 CIA는 처음으로 그를 암살하려 했다.

1998년 8월 케냐와 탄자니아 미국 대사관이 폭탄 공격을 받아 미국 정부는 다시 빈 라덴을 암살하려 했다. 미국 정부는 수단의 알시파 제약 공장에 폭탄을 퍼붓는 것으로 보복했다.

미국 관료들은 열 달 뒤에야, 그것도 보도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 공장이 테러 활동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제약 공장임을 인정했다.

미국 정부가 자신의 전 동맹들과 각을 세우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1996년 탈

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했을 때 미국무부 대변인 글린 데이비스는 탈레반 정책들에서 “반대할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탈레반은 CIA 자금을 무자헤딘에 전달했던 바로 그 기구인 파키스탄 군정보국(ISI)의 후원을 받았다.

빈 라덴은 1989년 느슨한 게릴라 조직인 알카에다의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9·11 이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침략하면서 빈 라덴을 잡는 것이 침략의 목표라고 주장했다.

탈레반은 미국의 침략을 피하려고 미국 정부가 증거를 제시하면 빈 라덴을 넘기겠다고 제안했다.

빈 라덴은 그때부터 도피 신세였다. 전세계적으로 알카에다의 소행으로 여겨진 공격들이 연달아 발생했지만, 모든 증거들을 보면 이것들은 서방 군사 활동이 늘어난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빈 라덴은 실제 행동을 지시하는 지도자라기보다는 상징적 존재였다.

10년 전 알카에다는 자신을 서방 제국주의 권력에 진정으로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세력으로 내세웠다. 다행히도, 상황은 변했다. 지금 중동에서 성장하는 대규모 항쟁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제국주의의 통제력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켄 올렌데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번역: 김용욱

아프가니스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얻은 것이 있는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10년째 진행 중이다. 아프가니스탄인 수만 명이 죽었고, 미군 1천5백9명과 영국군 3백60명을 포함해 해외 파병군 2천3백75명이 죽었다.

지난해는 이 오랜 전쟁에서도 가장 끔찍한 한 해로 파병군 7백11명이 죽었다.

9·11 이후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 영국 총리 토니 블레어와 다른 서방 지도자들은 탈레반이 알카에다에 은신처를 제공했기 때문에 공격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예전에 미국 동맹이었던 탈레반은 적이 됐다.

탈레반이 여성을 억압하는 것은 전쟁을 정당화하는 또 다른 도구로 활용됐다. 조지 부시의 부인인 로라 부시와 토니 블레어의 부인인 체리 블레어는 아프가니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남서쪽 난민촌 빈 라덴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수백만 명의 삶을 파괴했다.

사진: 트리니티 뉴스(소셜리스트 위크)

스탄에서 서방이 여성의 자유를 위해 싸운다는 점을 과시하려고 부르카에서 잘라낸 천조각을 입기도 했다.

그러나 단 한 순간도 여성 해방이 이 전쟁의 목적이었던 적은 없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나토군 14만 명 — 대다수가 미군이다 — 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 중이다.

온갖 총사령관들이 거쳐가고 온갖 제국주의 전략들 — 증파에서 반게릴라전까지 — 이 시도됐다.

하미드 카르자이 대통령이 주도하는 아프가니스탄 폭독각시 정부는 뺏속까지 부패해 있다. 지금 탈레반은 5년 전보다 더 넓은 영토를 통제하고 있다.

이 지역을 지배하려는 미국 정부의 몸부림 때문에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파키스탄의 상황도 갈수록 불

안정해지고 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목표가 여성 해방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이 광범하게 자행되고 있다. 지난해 불과 6개월 사이 여학교 20여 곳이 불타거나 파괴됐다.

2009년에는 카르자이 정부가 결혼 성폭력을 합법화하고 여성이 남편의 허락 없이 집밖으로 나설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다.

많은 생명이 죽었고, 엄청난 돈이 살육과 파괴에 사용됐다. 무엇을 위해서?

이 전쟁이 거둔 유일한 성과는 전 세계 최빈국 하나를 초토화한 것뿐이다. 아프가니스탄이 이런 고통을 당한 이유는 이 나라가 제국주의 전략에서 중요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외에는 없다.

오늘날 미국과 서방 동맹들은 아프가니스탄 민중의 민주적 권리를 위하는 척을 하지도 않는다. 대다수 나라들은 철군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는 이번 여름부터 미군이 철군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지배자들의 걱정은 하나다. 이라크에서 망신을 당한 그들은 자신들이 패배한 것으로 보이길 바라지 않는다.

그들은 빈 라덴 암살이 진실을 감추는 구실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즉, 교착 상태에 빠지고 도저히 미국이 이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전쟁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진실 말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번역: 김용욱

테러는 억압과 불의가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



9·11 희생자를 추모하는 모습 테러는 부시의 입지를 강화시켰다.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테러와의 전쟁’이 테러를 없애지 못한 것처럼 빈 라덴 암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오히려, 이번 사건은 테러 활동을 늘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러시아 혁명가 레온 트로츠키는 우리 지배자들의 독재와 억압 때문에 테러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절망과 복수심에서 그런 총동적 행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복수는 우리의 소망을 충족시킬 수 없다.”

게다가, 트로츠키는 마르크스주의자는 변화를 추구하는 정치 전략으로서 테

러주의에 “비타협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억압과 불의가 없는 세상을 만들려면 요인을 암살하고 사람들을 폭탄으로 날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을 뿌리째 제거해야 한다.

제국주의가 만든 참혹한 현실에 직면해 어떤 사람은 절망적인 심정에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반격하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노동계급과 억압받는 사람들이 자기를 억압하는 자들에 맞서 폭력을 사용할 권리를 부정하지 않는다. 사회주의자들은 지배계급이 순순히

자기 권력, 부와 특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안다.

그러나 그 투쟁은 몇몇 개인이나 엘리트 집단이 “대중의 뒤에서” 대신 벌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자신’이 제국주의 지배자들에 맞선 싸움을 벌이려면 자본주의 타도와 제국주의 패배가 긴밀히 연관된 과정임을 이해해야 한다.

자본주의에서 이 과업을 주도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노동계급의 집단적 투쟁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번역: 김용욱

노동조합운동의 위기와 정치적 노동조합운동

박설

최근 현대차에서 정규직 자녀 ‘특혜’ 요구안이 노조 대의원대회를 통과했고, 서울지하철에선 조합원 과반이 민주노총 탈퇴에 찬성 투표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운동 위기 주장이 더 불거지고 있다.

특히 정부와 조중동은 “민주노총의 추락” 운운하며 독설을 쏟아내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 박재완은 민주노총을 “대기업 정규직만 대변하는 소수의 노동권력”이라고 비난하며 “중소·영세·하청기업의 비정규직을 위해서도 … [이들의] 횡포를 방지할 수 없다”고 핏대를 올렸다.

그러나 최상위 부자·권력자 들을 위해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들을 짓밟아 온 장본인들의 이런 말은 정말 구역질난다. 지금 진정 추락하고 있는 것은 이 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다.

이들은 특히 민주노총의 정치투쟁과 전투성을 공격하고 있다. “민주노총식 정치·이념 투쟁과 대결 방식”이 “변해야”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다. 노동운동 위기는 거꾸로 “제대로 된 투쟁을 조직하고 함께하지 못한 [것의] 귀결이다.”(안재원 급속노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실제로 민주노총은 지난 수년간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확대 등에 맞서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 2008년 촛불항쟁 때 별다른 투쟁을 못한 것과 쌍용차 투쟁 때 살인해고를 막아내지 못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런 틈을 이용해 현대차나 서울지하철 노조에서 실리주의를 내세운 우파가 비집고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

전투성 약화

독재 정권에 맞서서 강력한 투쟁을 벌이며 민주노조 물결을 일으켰던 민주노총의 전투성과 연대의 전통은 왜 약화돼 왔을까?

물론 지금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누리고 있는 임금 수준과 노동조건은 명백히 노동조합을 통한 단결과 투쟁의 성과다.

그러나 민주노조 20년 역사 동안 노동조합이 안착화하면서 협소한 부문의 이해에 골몰하는 부문주의, 눈앞의 실리에 매달리는 경제주의도 함께 발전했다. 현장 조합원들의 정서에서 멀어져 투쟁보다는 협상을 중시하며 보수화하는 노조 상층 간부들은 이 과정에서 문제를 악화시켰다.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지배자와 유착해 비리를 저지르면서 위기를 더 부추겼다.

노동조합운동의 위기는 경제 위기와도 연관이 깊다. IMF 위기 이후 구조조정 속에 ‘안정된 정규직 직장’이라는 신화는 깨졌고, 민주노조는 이것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언제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있을 때 벌자’며 잔업·특근에 매달리기도 한다.

민주노조운동은 이런 현실을 타개하고자 산별노조 건설, 진보정당을 통한 정치세력화라는 ‘양 날개’에 힘써 왔다. 그러나 이것의 결과도 만족스럽지는 않다.

예컨대, 2009년엔 쌍용차 파업에서 급속노조가 보인 무기력 때문에 ‘산별노조 무용론’이 불거졌다. 쌍용차 파업 직후 급속노조 대의원의 단 7퍼센트만이 ‘급속노조를 신뢰한다’고 답했다. 2004년 국회의원 열 명을 배출해 커다란 기대를 모았던 진보정당도 2008년 대선 이후 분열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줬다.



5월 1일 121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대회 ‘노동계급의 단결 투쟁’이라는 메이데이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

일부 좌파는 투쟁을 회피하는 우파 지도부에 맞서 좌파 지도부 건설을 추구했지만, 이것도 진정한 대안이 되지 못했다. 현대차·서울지하철 등에서 좌파 노조 지도부도 제대로 싸워보지 않고 투쟁을 중단시키는 일이 벌어졌고, 이것이 낡은 냉소 때문에 다시 우파가 주도권을 쥔 수 있었다.

이런 경험들은 현장 조합원들의 투쟁과 자신감에 기반을 두지 않고선 산별노조도, 진보 의원도, 좌파 지도부도 그 자체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 줬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현장 조합원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확신하고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치가 중요하고 정치적 노동조합운동이 필요하다.

자신감

정치적 노동조합운동은 우선, 투쟁의 정당성과 확신을 불어넣을 이데올로기 전투를 뜻한다. 최근 대학 정소 노동자들의 잇따른 승리는 싸움의 정당성과 명분이 분명할 때 강력한 투쟁과 연대가 건설될 수 있음을 보여 줬다. 따라서 노동조합운동의 투사들은 운동에 정당성을 부여해 지배자들의 이데올로기 공격에 맞서며 노동자들의 사기를 높이려고 애써

야 한다.

또 정치적 노동조합운동은 부문주의에 맞서 단결과 연대를 추구하는 것을 뜻한다. 부문주의는 노동자들의 의식을 협소하게 만들어 투쟁을 마비시킨다. 현대차 노조 이경훈 집행부가 제시한 ‘정규직 자녀 우선 채용 요구안’을 대의원 과반수가 지지한 것은 전형적인 부문주의다. 비정규직 차별에 맞서 정치적 투쟁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만 비정규직

이 안 되게 하자’는 지극히 협소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현대차 노조가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비정규직과 단결할 때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그런 투쟁만이 많은 노동자들이 느끼는 비정규직화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노동조합운동은 이명박 정부의 정치 위기를 투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지배자들의 위기와 분열은 ‘싸워볼 만하다’는

생각을 낳고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높인다. 노동조합운동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 위기 고통전가와 고물가 방지 때문에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며 임금 인상·노조법 재개정 등을 위한 정치투쟁에 나서야 한다.

투사들은 이런 정치적 노동조합운동을 건설하며 그것을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사들의 네트워크 건설과 연결시켜야 한다.

제3노총과 실리주의 노선의 어두운 앞날

“노동계에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제3노총의 성공을 기원하는 조중동의 호들갑을 보고 있다면, 이제 노동운동의 중심은 실리주의로 이동할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실리주의 노선의 미래는 밝지 않다.

이미 한국노총 장석춘 지도부가 실리주의의 미래를 보여 줬다. 그는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맺고 몇 차례나 노동자들의 뒤통수를 쳤지만, 이명박에게 이용만 당하고 결국 욕만 먹다가 쓸쓸히 물러났다.

현대차 노조 이경훈 집행부가 내세운

실리도 궤퇴되다. 그가 고용 불안과 노후 불안에 시달리는 4만여 조합원들에게 제시한 것은 고작해야 몇몇 장기근속자 자녀들에게 ‘가산점’을 주겠다는 것뿐이다.

이것은 서울지하철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정연수 집행부의 위선을 간파한 노동자들은 이번 민주노총 찬반투표가 끝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명박 정부가 구조조정·반노동 정책 방향을 바꾸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노·사 협조로 얻을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조합원들도 정연수 집행부에 불

만을 제기하며 투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활동가들은 그때까지 조합원들 사이에서 투쟁을 호소하며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메이데이 집회에서 만난 서울지하철 노조 차량지부 조합원의 말이다.

실리주의는 경제 위기가 깊어질수록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사장들이 양보할 가능성이 줄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쟁”을 외치던 좌파가 제대로 투쟁과 승리를 만들어 내지 못할 때 실리주의 우파가 주도권을 쥔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규직은 더는 투쟁의 주체가 될 수 없는가

현대차 정규직 노조 지도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배신하고 정규직 ‘특혜’를 내세우자, 정규직 노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최근 “정규직 노동자들이 보수화돼 더 이상 계급 형성을 주도할 수 없게 됐다”며 “[비정규직이라는] 새로운 계급 주체 형성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규직 노조에 배신감을 느끼는 이남신 동지의 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퍼진 책임은 명백히 현대차 노조 이경훈 집행부에 있다.

현대차 정규직 노조 파업 현황		
연도	파업 일수	파업 손실액
1998	36	9,644억
2005	11	5,795억
2006	36	1조 6,443억
2007	13	2,595억
1987~2007	351	10조 8,439억

그러나 정규직 노조 지도부와 노조가 보이는 문제점 때문에 정규직 노동자들의 잠재력까지 불신해선 안 된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대다수를 차지하

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힘과 가능성은 여전히 매우 크다. 최근 두 달 동안 벌어진 현대차 울산 1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공장 가동률을 절반 밑으로 떨어뜨리자 〈월스트리트저널〉은 “강성노조 망령이 안 떠난 현대차”라고 우려했다. 노동조합으로 조직돼 오랜 투쟁 속에서 단련된 정규직 노동자들이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공장을 멈춰 세우고 지배자들에게 압력을 가했던 것이다.

이 힘은 진정한 변화와 개혁을 이루는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지난 연말 파업을 벌였던 비정규직 노동

자들도 그토록 정규직의 연대를 바랐던 것이다.

따라서 이런 정규직 노동자들을 투쟁의 주체로 만드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 ‘비정규직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정규직이 임금을 양보하고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주장은 답이 아니다.

이것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을 가로막을 뿐이다.

활동가들은 끈기있게 정규직·비정규직의 단결을 추구하며 정규직 노동자들의 잠재력이 사회 진보와 변혁을 위한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

칼 마르크스의 《임금, 가격, 이윤》

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투쟁은 정당하고 필요한가

얼마 전 한국 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과도한 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 압박 요인’이라며 올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을 3.5퍼센트 이내로 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물가는 1년 전보다 4.7퍼센트나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에게는 물가 인상을 뛰어넘는 임금 인상이 간절하다.

게다가 평범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쪼골 오를 때 대기업 고위 임원들이야말로 ‘과도한 임금 인상’을 해 왔다. 그래서 현재 대기업 임원들의 연봉은 직원들의 14배나 된다. 주식 배당금 등이 늘어나면서 이견회와 정몽구의 재산은 무려 8조 원을 넘어섰다. 따라서 경총은 저 단위 쪼잔한 권고안이 아니라 자신들의 반성문부터 작성해야 한다.

그럼 만약에 임금이 하락한다면 물가는 떨어지는 걸까? 천만에 말씀이다. 1998년과 2008년에 임금이 하락했지만 물가는 결코 내려가지 않았다. 명목임금과 실질임금 모두 하락했다.

경총의 주장 즉,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오늘날 주류 경제학에 의해 광범하게 유포돼 있다. 마르크스가 쓴 소책자인 《임금, 가격, 이윤》은 이런 주장들에 맞서 노동자들의 이익과 투쟁을 방어할 수 있는 과학적 무기를 제공한다.

임금, 가격, 이윤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자본가들이 상품을 판매할 때 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가격을 올린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자본가들이 가격을 멋대로 올릴 수 있다면 그들은 임금 인상이 없더라도 수시로 가격을 올려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언제라도 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가격을 올리면 될 테니 말이다.

하지만 자본가들은 자본 간 경쟁 압력에 짓눌려 있다. 임금 인상에 직면한 자본가가 자신의 이윤을 보존하기 위해 가격을 올리면 자신의 상품은 덜 팔리고 결



‘임금 인상이 물가를 올린다’는 지배자들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

국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다. 이런 압력 때문에 개별 자본가는 임금이 오른다고 가격을 올리기보다는 오히려 저가 먹기로 자신의 이윤을 줄이게 된다.

즉 임금 인상은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줄이는 것이다.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자본가들의 이윤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이다.

나아가 전 산업에 걸쳐 임금이 올랐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주로 소비하는 생활필수품 소비가 늘 수 있다.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는 자본가들은 소비가 늘어나는 것을 이용해 상품 가격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치품을 생산하는 자본가는 수요가 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사치품을 생산하는 자본가들은

사치품 생산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생필품 생산에 투자할 것이다. 결국 생필품 공급이 늘어나면서 생필품 가격은 예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처럼 임금이 산업 전반에 걸쳐 상승할지라도 가격은 일시적으로 상승할 뿐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다.

노동가치론

그렇다면 가격이 결정되는 근본적 원리는 무엇인가? 마르크스는 ‘수요 · 공급 법칙’으로 가격을 설명하려는 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오르고 반대로 수요가 적으면 가격은 하락한다. 이는 지당한 원리며 마르크스도 이를 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더라도 소설책은 1만 원에, 휴대폰은 10만 원에, 컴퓨터는 1백만 원에 팔린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상태에서 개별 상품들의 가격은 천차만별인 것이다. 왜 특정 상품은 특정 가격에 판매되는 것인가?

마르크스는 노동가치론을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어떤 상품의 교환가치는 “다른 모든 상품들과 그것이 교환되는 양적 비율을 뜻한다.” 다양한 개별 상품들의 교환 비율을 양적으로 측정하려면 모든 상품에 내재된 공통적인 속성을 기준점으로 삼아야 한다.

마르크스는 이것이 바로 노동이며, 상품이 교환되는 양적 비율은 한 사회의 평균적인 숙련도와 평균적인 노동강도 하에서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노동의 상대적 양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즉, 상품 생산에 투입된 사회적 노동량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각각의 상품에 투입된 사회적 노동량이 다르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의 균형상태에서도 개별 상품들의 가격이 다른 것이다.

그렇다면 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임금은 자본가들이 구매하는 노동력에 대한 화폐적 표현인데, “다른 모든 상품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노동력의 가치도 그것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량에 의해 결정된다.”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는 노동자의 생존과 번식 그

리고 해당 노동력을 개발하고 훈련하는 비용이 든다.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노동력의 가치, 즉 그들의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량 이상으로 노동하도록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해도 남는 잉여가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이윤이다.

이윤은 자본가의 경영과 투자 위험 감소에 따른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 노동자를 착취한 잉여인 것이다. 자본가들의 수중에 있는 이윤의 원래 주인은 노동자이며 따라서 비정규직뿐 아니라 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임금 인상 요구는 완전히 정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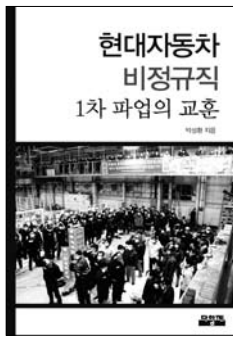
임금과 이윤의 본래 문제는 “투쟁하는 두 쪽[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의 힘의 문제로 귀착한다.” 따라서 잉여를 둘러싼 계급투쟁에서 노동자 계급이 승리해 더 많은 임금을 쟁취해야 한다. 물론 궁극에서는 착취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에 도전하여 임금 제도 자체를 철폐해야 할 것이다.

강병욱

《임금, 가격, 이윤》은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3권(박종철출판사)에 실려 있다.

추천 소책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1차 파업의 교훈



박성환 지음 | 다함께 발행 | 3천 원
구입 문의 : www.alltogether.or.kr
02-2271-2395

김정훈 전교조 전북지부 지부장 인터뷰

“진보교육감은 교원평가 반대 소신을 지켜야 해요”

이명박 정부가 경쟁교육을 강화하고 교사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교원평가제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편법적으로 법을 고쳐가며 시·도 교육청이 교원평가를 시행하도록 강요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진보교육감들이 이런 압력에 굴복해 교원평가제를 수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승환 전북 교육감도 교과부의 안을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보여 전교조 전북지부는 4월 26일부터 전북 교육청 접견실을 점거했고 지부장은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4월 27일부터 단식을 하고 있는 김정훈 전교조 전북 지부장을 인터뷰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선거 당시 공약이 교원평가 반대였습니다. 교사들을 서열화하는 교원평가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발표하면서 전국적으로 큰 기대를 받았지요.

그런데 교과부는 체크리스트 방식의 교원평가를 고집하면서 교육감을 압박했습니다. 체크리스트는 여러 가지 항목에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점수가 낮게 나온 사람들을 징벌형 강제 연수를 시키



고 결국 구조조정하려는 겁니다.

이런 교원평가는 결국은 학생들 성적 경쟁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학교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일부 몰지각한 교장선생님은 초등학생들을 9시까지 공부시킵니다.

그런데 교원평가까지 하면 애들을 더욱 닥달해 점수 올리는 구조로 가지 않겠

습니까.

가장 끔찍한 모습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처음에는 체크리스트 방식을 거부하고 수업에 한해서만 서술형 평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연수도 강제 연수가 아니라 ‘자율’ 맞춤형 연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는 말 안 들으면 예산 1백70억 원을 깎겠다. 전문직 장학사 수 줄이겠다. 시도 교육청 평가를 최하위로 주겠다.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며 압박을 넣었어요.

4월 26일에 김승환 교육감을 직접 만나서 확인을 했더니 여러 가지 교과부 압력이 있고 해서 체크리스트 방식을 병행하는 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어요.

저희는 교과부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소신을 지켜달라고 말하면서 농성에 들어갔어요. 계획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상황이 이러해서 주저앉게 된 거예요.

김승환 교육감을 만드는 데 전라북도 진보세력들이 온 힘을 다 바쳤는데 ...

지금 이 상황은 밥 굶는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프네요.

물론 여섯 진보교육감들의 행보는 여러 가지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학교 혁신운동도 그렇구요. 학생인권 조례도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원평가를 두고는 전북, 강원, 서울, 광주 정도가 반대를 했는데 지금 와서 다 무너졌죠.

소신과 철학

김승환 교육감도 지금까지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지키려고 했던 점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교과부의 압력이 있다는 점도 인정을 하구요.

그렇지만 지금 와서 이렇게 타협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 압력은 모든 사안마다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진보교육감은 일제고사, 교원평가 등 소위 우리가 MB 특권교육이라고 했던 요소에 반기를 들고 당선한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 소신을 분명

히 밝히고, 교과부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요구를 넘어서 자기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해 봐야 합니다. 그게 자신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입니다.

30여 단체가 포함된 전북 교육혁신네트워크나 연대 단체들은 원칙 있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신과 원칙을 지키는데 시정명령이 내려오면 전북 도민의 이름으로도 맞설 수 있고요, 교육감은 교과부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이런 세력들을 믿어야 합니다.

저희는 진보교육감에 대해 협력할 건 협력하고, 비판하고 투쟁할 건 투쟁할 겁니다.

4·27 재보선 이후에 정치 환경도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투쟁의 동력을 끌어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북지부가 하는 투쟁이 불씨가 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경쟁교육을 심화할 교원평가를 저지하는 투쟁에 모두 함께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정리 정선영

연속혁명 ①

노동계급이야말로 변화를 지지하는 세력이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혁명 물결이 리비아와 시리아 등에서 계속되고 있다. 특히, 튀니지와 이집트에서는 독재 정권과 주변 인사를 타도라는 정치적 요구를 넘어 사회적 정의를 요구하는 투쟁으로 심화하고 있다. 20세기 초 러시아 혁명이 레온 트로츠키는 이미 이런 혁명의 심화 과정을 분석했다. 그의 ‘연속혁명론’은 오늘날 혁명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서 여전히 배울 점이 많다. 그래서 연속혁명을 다루는 연재를 시작한다.

노동계급이 신뢰할 수 있는 세력은 누구인가? 민주주의가 확대되려면 어떤 방법으로 투쟁해야 하는가? 계급사회는 철폐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사회주의자라면 언제나 고심해 본 문제를 중 일부다. 칼 마르크스도 예외가 아니었다. 마르크스는 1848년에 유럽을 휩쓴 혁명을 겪고 나서야 노동자가 “연속” 혹은 장기간 지속되는 혁명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게 됐다. 1848년에 유럽의 지배자들은 군주들이었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여전히 통일 국가를 이루지 못했다. 봉건제라는 이 낡은 제제는 자본주의적 세력들이 성장하게 되자 점차 이들과 갈등을 빚게 됐다. 조만간 자본가 계급으로 부상할 공장 소유자, 기업가, 상인 — 마르크스는 이들을 부르주아지라 불렀다 — 들은 자신의 성장을 가로막은 법적 구속 때문에 점차 좌절을 맛보았다. 유럽 전역에서 변화를 바라고 자유의 확대를 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나 자본가들만 이러한 변화를 바란 것은 아니었다. 빈농을 비롯해 산업이 성장하면서 그 수가 늘어난 노동자들도 역시 불만이 산더미 같았다. 사회적 조건은 저잡했다. 노동자들은 빈민가에서 물러 살았다. 유럽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식량이 부족해 폭동이 일어났다. 혁명은 1848년 2월 프랑스에서 일어났다. 당시 파리에서는 봉기가 일어나 군주 루이 필리프가 쫓겨났다. 투쟁의 물결은 얼마 안 돼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와 헝가리로 번졌다.

혁명적 계급

당시 마르크스와 그 절친한 동지인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망명 중이었다. 그들은 투쟁에 뛰어들기 위해 급히 독일로 돌아갔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자신들이 광범한 민주주의 운동에서 급진 좌파 구실을 하게 될 것이라 이해했다.

엥겔스는 이후에 자신들이 이 운동을 지켜보기만 했다면 ‘황야의 설교자’들로 이루어진 ‘조그만 분파’에 그치고 말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함께 할 세력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였다.

오늘날 자본가 계급을 동맹 세력으로 신뢰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열토당도않은 생각처럼 틀릴 것이다. 그러나 1848년에 자본주의는 아직 확립돼 가는 중이었다.

마르크스를 비롯한 혁명가들은 자본가들이 낡은 봉건질서를 분쇄하는 싸움에서 가장 선두에 서리라고 믿었다. 1789년 프랑스대혁명에서 이미 그러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또한 자본가의 혁명에 이어 급세 노동자 혁명이 뒤따른다고 예측했다.

에스미 추나라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번역: 천형석

논쟁

아랍 혁명과 여성 해방

아랍 혁명은 21세기 혁명의 현실성뿐 아니라, 여성이 사회변화의 주인공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튀니지 여성들은 프랑스에 맞선 독립운동 이래로 사회적 변화에 앞장섰고, 이번 혁명에도 열정적으로 참가했다. 이집트 여성들은 타흐리르 광장을 지키고 대중파업 물결에 참가하면서 무바라크를 쫓아낸 주역이었다. 리비아의 가장 보수적인 도시에서조차 여성들은 용감하게 시위를 벌였고, 시리아에서도 여성들은 아사드 정권에 맞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다. 예멘의 대통령 살레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섞여서 시위를 벌이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비난했지만, 여성들은 전례없는 규모로 시위에 동참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혁명은 아랍 여성들이 수동적이고 가정보안 따무른다는 편견을 깨부셨다.

하지만 체제에 아로새겨진 여성 차별의 뿌리가 아직은 깊다는 것을 보여 준 또 다른 그림도 있었다. 이집트에서 한 무리의 남성들이 타흐리르 광장에서 여성들을 쫓아내려 한 것이다. 헌법개정위원회에 여성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 등이 그 사례다.

그래서 한국 진보진영 일각에서

는 아랍 혁명에서 여성의 능동적 구실에 주목하면서조차 혁명 후 오히려 여성의 권리가 후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한다.

여성은 부역으로 돌아갔나?

세계상임구소 김애하 연구원은 “혁명 후 … 여성은 마치 계획됐던 것처럼 다시 부역으로 보내지고 있다”, “여성이 중동의 혁명적 변화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는 불분명하다” 하고 주장한다. (“혁명 후 여성은 광장에서 어디로 갔나!”)

이것은 아랍 혁명으로 이슬람주의가 득세할 것이고, 그러면 여성의 권리가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돼 있다. 김애하 씨는 1979년 이란 혁명 후 이슬람주의 정부가 집권한 사례 등을 거론한다.

전국학생행진(이하 행진)은 이번 혁명이 ‘이슬람 근본주의로 빠질 것이라는 전망은 “과장”이라고 본다. 하지만 세속적 정부 하에서와 달리 “이슬람 단체의 정치활동이 회복되는 분위기 속에 여성의 권리가 후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좀더 일반적인 맥락에서 투쟁 후 여성은 주변화된다는 식으로 주장하기도 한다.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10호)

우선,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여성이 부역으로 보내지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시위에 참가한 여성들을 공격한 것은 혁명에 참가한 남성들 대부분의 태도는 아니었다. 무엇보다 혁명 과정에서 얻은 영감과 자신감, 투쟁의 경험 덕분에 여성들은 결코 고분고분 부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김애하 씨는 아

랍 혁명이 기적해야 자본주의적 세속주의와 이슬람주의 사이에서 진동할 것이라는 가정을 깔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번 튀니지 · 이집트 혁명은 이슬람주의 단체의 지도와 통제 바깥에서 탄생했다. 물론 대중은 세속적인 세력의 독재에 이끌렸고, 이런 정서에서 힘입어 이슬람주의 야망이 다음 선거에서 득세할 수도 있다. 여성들은 세속적인 옛 정권 계승자보다는, (여성문제에 대해 상대적 보수성을 띠고 있더라도) 반제국주의적이고 신자유주의에 비판적인 이슬람주의 정당들을 더 나은 대안으로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혁명은 아직 진행 중이고, 반드시 이슬람주의의 득세로 귀결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혁명에 참가한 세력들이 혁명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느냐가 중요하다.

이슬람주의 : 이데올로기와 현실의 모순

실사 이슬람주의 세력이 권력을 잡는다 해도, 그들이 1백 퍼센트 이슬람주의적 여성관을 관철할 것이라는 전망은 일반적이다.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이슬람주의자들은 샤리아법을 곧이곧대로 따르는 근본주의자들이고, 여성을 베일로 공중 싸서 부역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중적 이슬람주의 단체들 대부분은 자본주의가 성장하고 여성 노동력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그에 따라 여성에 대한 관점을 유연하게 바꿔 왔다. 그래서 그들의 이데올로기와 실제 정책 사이에는 모순이 존재한다.

가령, 이집트의 무슬람형제단은 여성의 베일 착용과 도복 문제에 관해서는 매우 보수적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성이 대학에 가고, 직장에 다니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찬성한다. 무슬람형제단은 이집트에서 여성 회원 수가 가장 많은 단체다. 무슬람형제단의 청년 회원들이 지도부의 보수성에 종종 불만을 표출하고 세속 좌파에도 개방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층 여성 회원들 중 일부는 지도부의 모순적인 태도를 비집고 여성해방에 대한 더 급진적 전망을 발전시킬 수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이슬람주의 정권인 이란 정부조차 여성 정책을 수정해 왔다. 이란—이라고 전쟁과 전후 경제 재건 속에서, 이란 정권은 부족한 노동력을 메

우기 위해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1984년에 아야톨라 호메이니는 “여성은 이슬람 법령의 틀 내에서 경제 · 정치 · 사회 문제에 참여할 수 있다”고 연설했다. 나중에는 파인과 낙태에 대한 태도도 바꿨다.

이란 여성은 주변화되지 않고 다양한 직종에 종사해 왔다. 여성들이 노동자로 대거 진출하자 여성들의 자의식이 향상됐고, 이것은 정부의 여성차별적인 정책에 맞서 저항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 그 결과 “가장 서구화한 친미 정부 팔레비 때보다 이슬람 정부가 지배하는 지금, 여성의 성 의식이 더 높다.”(마르얏 포야, 이란 출신 여성 사회주의자)

결국 아랍 여성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정권이 세속적이냐 이슬람주의적이냐가 아니라, 물질적 변화와 그에 따른 여성들의 조건과 의식 변화, 그리고 여성들의 투쟁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아랍 혁명은 여성들이 여성 해방을 향한 투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것이다.

한편, 나라별로 차이는 있지만 아랍 국가들이 크고 작은 법적 평등 조처들을 도입했음에도 여전히 여성들은 차별받고 있다. 이것은 아랍 세계의 특수한 문화나 가치관 때문이 아니다.

체제 변화와 여성 해방

아랍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는 여성차별적 기반 위에 유지되고 있다. 자본주의의 지배자들은 여성들이 전혀 없이 많이 집박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가족에 대한 여성의 의무를 각인시키곤 한다. 여성이 가정에서 무보수로 하는 재생산 노동이 체제 유지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 때문에 자본주의의 지배자들은 재생산 노동을 사회화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부를 투자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성들은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열등한 취급을 받는다. 세속적 자본주의 국가에서 여성들은 베일 착용을 강요받진 않지만, 눈요깃거리로 취급되고 외모로 평가받는

파라서 아랍 혁명이 여성차별을 뿌리뽑고 진정한 여성 해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혁명은 자본주의의 체제 자체에 도전하는 사회혁명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아랍 민중은 그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지금보다 노동계급의 규모가 훨씬 작을 때도 이란의 노동자들은 혁명을 일으켰고, 노동자병의회(쇼라)를 건설했다. 쇼라는 직장 보육원을 설립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했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나 여성 문맹 퇴치, 여성 노동자 건강 문제 등을 다뤘다. 지금은 훨씬 더 강력하고 큰 규모의 노동계급이 아랍 세계에 존재한다.

“여성권리 정취를 위한 그녀들의 중단 없는 투쟁”이 중요하다는 행진의 결론은 옳다. 그것은 체제를 변혁하려는 투쟁 속에서 남성과 여성이 단결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최미진

맑사즘 2011
변 · 혁 · 이 · 나 · 야 · 만 · 이 · 나

일시 : 7월 21일(목) – 7월 24일(일)

장소 : 서울(추후 공지)

주최 : 다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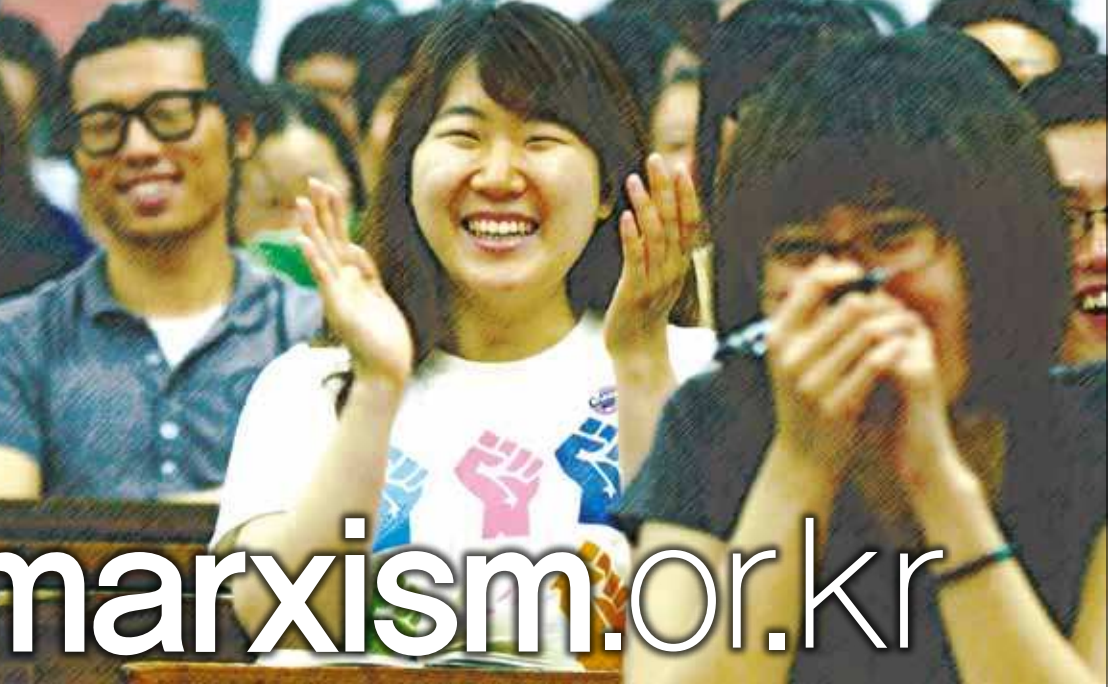
알짜배기 주제 60여 개 | 힘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연사들 | 민주적이고 열린 청중 토론

아랍 혁명이 2011년 상반기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혁명은 세계적 경제·정치 위기라는 맥락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세계 지배자들은 유럽의 내입 반대 투쟁과 살아나는 미국 노동자 투쟁을 보며 혁명적 격변이 아랍만의 일 이 아닐 수 있음을 각성합니다. 한편,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자본주의 체제의 야만성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들 체제의 탐욕과 일본 지배자들의 핵무기 보유 욕구 때문에 광범한 사람들이 방사능에 오염된 공기과 물과 음식을 삼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화랑과 절망이 교차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맑사즘 2011에서는 사회주의의 아니면 아만주의라는 갈림길에서 우리가 선택할 대안이 무엇인지 토론하려 합니다.

더 나은 세계를 바라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연사	
알렉스 엘리니코프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SMP의 중앙위원이자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교수 국내에 번역된 책으로 (무너지는 함성), (한자본주의 선언),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 《제3의 길은 없다》 등이 있다.	정성진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경성대학교 교수 천보선 전교조 교사, 진보교육연구소 연구원 이한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최일봉 다함께 운영위원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허종강 전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그 밖에 많은 노동운동·사회운동 활동가들, 진보적 학자와 저술가들이 맑사즘 2011 연사로 오실니다.

다양한 주제들		
아랍 세계를 뒤흔드는 혁명 - 아랍 혁명의 현황과 전망 - 중동의 연속혁명 - 시온주의와 팔레스타인	핵 재앙과 환경 - 재앙을 발전하는 핵발전소 — 핵 발전은 불가피한가? - 마르크스주의에서 본 기후변화 - 마르크스의 생태학	마르크스주의는 세상을 어떻게 읽는가? - 마르크스주의와 정의 - 마르크스주의와 종교 - 마르크스주의와 국가 - 마르크스주의와 여성 억압 - 마르크스주의와 노동조합 운동 - 마르크스주의와 이니키즘
경제 위기를 진단한다 - 세계 경제 위기: 현황과 전망 - 한국 경제, 나아지고 있는가? - 중국 경제, 계속 잘 나갈까?	제국주의 - 제국주의와 국제 정치경제 - 미국과 중국, 동아시아 산맥구조는 기능하?	그 외 - 과학은 왜 우리의 미래를 지배하는가? - 범죄와 형벌의 정치경제학 — ‘위험’ 코드는 무엇을 노리는가? - 소셜 미디어와 사회운동 — 트위터가 혁명을 가져오는가? - 비교초기와 교육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 대안은? - 케인스주의가 해결책인가? - 금융세계화와 위기의 원인 - 발전국가 논쟁 - 사회적 기업 — 더 나은 자본주의를 위한 대안인가?	미래 보는 2012년 총선과 대선 쟁점들 - 진보대통합과 좌파 - 북지파가 논쟁	----- 그 외에도 학생운동), 여성, 이주, 성소수자, 보건의료 등 다양한 주제로 60여 개의 포럼이 열릴 예정입니다.
위기, 공통 전가, 살아나는 저항들 - 실업과 빈곤 - 왜 노동운동이 중요하? - 유럽의 내입 반대 투쟁 - 미국의 노동자 투쟁 — 과거와 현재 - 중국의 저항운동	사회주의, 공급타 - 인간본성 때문에 사회주의는 불가능한가? - 시장 없는 사회주의는 가능한가? -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 사회민주주의와 사회주의 - 소련 붕괴 20년 — 소련은 사회주의 사회였는가? -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인가? - 사회주의의 전략 전환 — 공중전선을 중심으로	



marxism.or.kr

지금! 참가 신청하세요

문의 : 02-2271-2395 | mail@marxism.or.kr

참가비 : 하루 13,000원 / 나흘 40,000원

대학생 할인 : 하루 11,000원 / 나흘 30,000원

청소년·이주노동자·장기투쟁직업정 노동자 할인 : 하루 5,000원 / 나흘 15,000원

단체 할인 : 10명 혹은 많이 갈때

학생회, 노동조합, 동아리 등 한 단체에서 10명 이상이 등록하면

나흘 티켓에 한해 15퍼센트 할인해 드립니다.

(대학생, 청소년, 이주노동자, 장기투쟁직업정 노동자는 해당 요금에서 추가 할인 적용)

충분한 청중성 토론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에게 3~4문의 발언권을 보장합니다.

업데이트 되는 정보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역: 정중수

1991년 5월 투쟁 20주년

학생과 노동자 들은 어떻게 독재 정권에 항거했는가

1991년 4월 26일 명지대학교 1학년이었던 강경대 열사가 전투 경찰 체포조 일명 ‘백골단’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죽었다. 이날부터 87년 6월 항쟁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졌고, 수많은 학생과 청년 그리고 노동자들이 노태우 정권에 맞선 거대한 항쟁을 벌였다.

1991년 5월 투쟁의 배경에는 경기 후퇴가 있었다. 이 같은 경제 상황에서 노태우 정부는 1987년 민주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에 밀려 양보했던 것들을 다시 빼앗으려고 했다. 이미 1989년 봄부터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했고 울산 현대중공업 파업에는 군대까지 투입했다.

1990년 1월 22일 김영삼과 김중필을 끌어들이 이른바 3당 합당을 통해 여소야대 국회를 여대야소로 바꾸며 노태우의 공격은 더 강화됐다. ‘범죄와의 전쟁’을 핑계로 헌병들이 서울 시내 곳곳에서 M16 소총을 지닌 채 순찰을 하기도 했다.

공안정국 속에 양심수는 1989년 1천 5백25명, 1990년 1천6백28명으로 늘어났다. 강경대를 시위 현장에서 살해한 것은 이 같은 탄압의 결과였다.

당시에도 물가 인상과 등록금 인상이 이어지며 대중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었다. 소비자 물가는 정부 공식 통계로도 1990년에 8.6퍼센트, 1991년에는 9.3퍼센트까지 치솟았다. 강경대 열사가 사망한 바로 그날 집회도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을 했다는 이유로 연행된 총학생회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였다.

이런 상황에서 노태우 정권의 대형 비리와 부패가 연일 폭로되면서 불만은 더욱 커졌다.

5월 투쟁의 전개

5월 투쟁은 바로 이런 불만과 분노가 강경대 열사의 죽음을 계기로 폭발한 것이다. 노태우 정부는 강경대 열사가 사망한 바로 다음 날 내무부 장관을 경질하고 현장에 있었던 전경 5명을 구속했지만 이런 조처는 대중의 불만을 잠재우지 못했다.

거리의 학생들은 ‘해체 민자당, 타도 노태우’를 외쳤고,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전투경찰에 쫓기는 학생들을 숨겨 주는 사람들도 많았고 음식이며 물을 시위대에게 주고 가는 사람들도 많았다.

안타깝게도 일부 젊은 학생과 청년, 노동자 들은 울분을 참지 못해 분신으로 저항했다. 이들의 죽음은 당시 노태우 정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깊은 절망 속에 빠뜨렸는지를 보여 줬다.

학생들의 투쟁은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노동조합들이 항쟁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5월 6일 당시 한진중공업 노조 박창수 위원장의 옥중 의문사는 노동자 투쟁에 기름을 부었다.

학생들은 5월 8일 전국의 대학 1백 45곳에서 동맹휴업에 돌입했고, 노동자들은 5월 18일 1백56개 작업장에서 ‘박창수 위원장 옥중살인 규탄과 폭력통치 종식을 위한 전국 총파업’을 조직했다. 학생들은 강경대 열사가 죽은 후 6월 말까지 거의 매일 밤낮으로 시위를 벌였다.

한편, 강경대 열사가 죽음을 당한 바로 다음 날 ‘고 강경대 씨 폭력살인 규탄과 공안통치 종식 범국민 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가 꾸려졌다. 대책회의는 당시 김대중이 이끌던 신민당부터 학생운동을



사진 출처: 강경대열사추모사업회

5월 투쟁의 투사들은 독재 정권에 맞서 영웅적으로 저항했다.

대표했던 전대협 그리고 노동조합까지 포함하는 조직이었다.

그런데 김대중의 신민당은 대책회의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내거는 것에 반대하면서 노태우 정권의 숨통을 틔워 줬다. 많은 단체들이 김대중을 비판했지만 김대중과 독립적으로 노태우 정권과 맞서려 하지는 않았다.

거리의 학생들은 김귀정 열사처럼 최루탄에 질식사하면서도 독재 정권에 끝까지 영웅적으로 맞섰다. 노동자들도 투쟁에 함께 했지만, 전노협이 나중에 ‘구체적인 요구와 목표를 바탕으로 투쟁이 집중되고 확대되지 못했다’고 자평했듯이, 정치적 요구에 물가 인상과 임금 감소에 반대하는 경제적 요구를 결합시키

며 더 많은 노동자들을 투쟁에 동참시키는 것으로 나아가진 못했다.

노태우 정부는 이 틈을 파고들어 ‘유서대필’ 사건을 날조했다. 검찰은 강경대 열사의 장례식 날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 발표했다. 그러나 ‘유서대필’ 사건이나 총리 정원식이 외대에 갔다가 계란과 밀가루를 맞은 사건 때문에 5월 투쟁이 사그라든 것은 아니다. 이미 그 전에 우리편이 투쟁 확대의 기회를 놓치고 있었다.

영웅적으로

얼마 전 <경향신문>은 강경대 사망 20주기를 다루며 ‘5월 투쟁의 실패가 전투성 일변도에서 대중성 확보로 대전환

하는 계기’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5월 투쟁이 더 나아가지 못한 이유는 전투성이 아니라 정치에 있었다.

민주주의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도 독립적인 노동자 계급의 투쟁이 필요하다는 정치가 필요했다.

또한 91년 투쟁 이후 학생 운동이 상당한 후퇴를 한 이유는 단지 91년 5월 때문이 아니었다. 학생 운동 활동가들은 같은 해 8월 소련 몰락으로 결정타를 맞았다.

소련 몰락은 소련이 사회주의이며 대안이라고 생각하던 수많은 활동가들을 좌절하게 했다. 서방 자본주의와 다를 바 없는 착취·억압 체제를 사회주의라고 착각한 스탈린주의 정치가 파산한 것이

었다.

좌절한 많은 투사들이 스탈린주의에서 벗어나 진정한 마르크스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청산하거나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마르크스주의같은 쪽으로 빨려 들어갔다.

소련을 국가 관료들이 주도하는 또다른 착취 체제로 분석하며 아래로부터 노동자 계급의 자기 해방이라는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복원하는 국가자본주의 이론이 그래서 중요했다. 국가자본주의 이론은 당시 일부 활동가들이 좌절하지 않고 사회변혁의 길에 계속 헌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구실을 했다.

김태현

5월 투쟁은 쓰라린 기억일 뿐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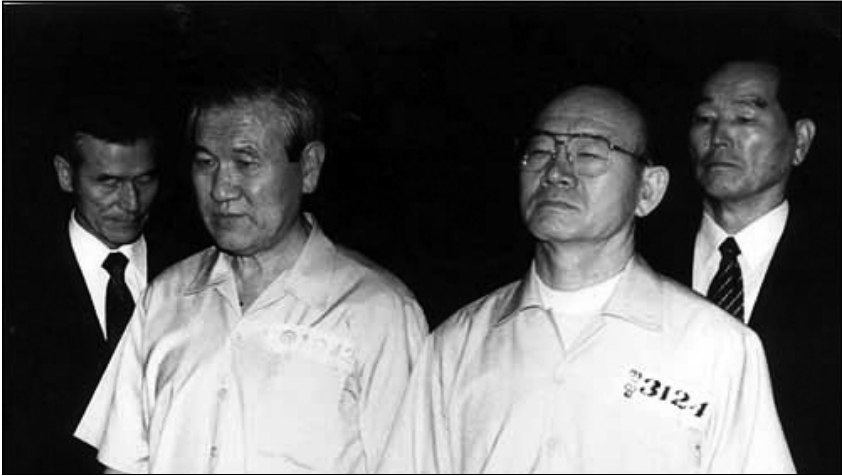
흔히 91년 5월 투쟁을 패배했다고 평가하며 당시 투쟁에 참가했던 사람들에게 ‘트라우마’(상처)로 남아 있다고들 한다. 강경대 열사 사망 20주기를 앞두고 특집 기사를 낸 <한겨레21>도 <경향신문>도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보는 것은 일면적이다. 강경대 열사가 사망한 직후 즉각 거리로 쏟아져 나온 학생들의 투쟁은 전노협의 하루 파업을 이끌었다. 전국적으로 50만 명이 운집한 5월 9일 “민자당 해체와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범국민대회”가 있었기에 골수 우익인 총리 노재봉을 퇴진시키고 내각 사퇴를 이룰 수 있었다.

노태우 정권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90년 내내 하루에 세 명 꼴로 투사들을 구속하는 등 이른바 ‘공안정국’을 조성해 87년의 투쟁의 성과를 되돌리고자 무진 애를 썼다.

5월 투쟁은 독재를 강화하고자 한 노태우 정권의 시도에 항거해 87년의 성과를 지키고 반동의 공세를 저지시켰다. 5월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지배자들은 군부 출신이 아니라 김영삼을 내세워 ‘문민정부’를 출범시켰던 것이다.

십여 명의 열사가 사망하고 수십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는데도, 살인자 노



1991년 5월 후에도 “급진적 거리 정치”는 계속됐다. 95년 두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것도 그 결과였다.

태우 정권을 퇴진시키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지만, 이것은 당시 운동의 지도부가 부르주아 야당 — 김대중은 내각 사퇴에 만족하고는 투쟁을 진정시키려 했다 — 에 크게 의존하고 부르주아 개혁주의의 한계에 머문 채 노동자들을 계급적으로 동원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전노협은 노태우 퇴진을 내걸고 정치 파업을 벌였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임금 인상 등의 경제적 요구를 함께 내걸고 파업을 조직해 노동자들을 진정

대중적으로 동원했다라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수도 있었을 것이다.

5월 투쟁이 끝난 후 투쟁을 냉철하고 꼼꼼히 평가해 보기도 전에, 당시 활동가들은 8월 소련에서 ‘공산당’의 쿠데타가 민중의 항쟁으로 패퇴되고 마침내 소련이 해체되는 세계사적 사건을 맞이했다. 그래서 소련을 위시로 한 동유럽 혹은 북한 체제를 대안으로 여기던 활동가들은 큰 절망감을 느꼈고 이런 패배감과 쓰라린 정서를 투영해 5월 투쟁을 일면적으로 돌아보는 것이다.

<한겨레21>이 말하듯이 “이후 91년 5월과 같은 급진적 거리 정치는 재연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91년 5월 이후, 특히 8월 이후 활동가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대안 부재로 방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저항은 거듭 일어났다. 학생들은 91년에는 노태우를 퇴진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95년에 학생들의 투쟁은 다시 부활해 광주항쟁을 학살한 전두환·노태우를 구속하는데 결정적 구실을 했다. 이듬해인 96년에 등록금 투쟁에서 시작된 학생들의 저항은 그해 말 노동법 날치기에 항의해 벌어진 역사적인 노동자 대중파업을 고무했다.

학생들은 2002년 여중생 사망 항의 시위와 2003년 반전 동맹휴업을 벌이며 사기를 회복하기 시작했고, 2008년 촛불항쟁으로 다시금 새롭게 급진화하며 ‘촛불세대’가 생겨났다.

그러므로 위기의 시대에 앞으로 거대한 투쟁이 도래했을 때를 대비해, 새롭게 급진화한 세대들이 노동계급의 자주적 행동에 바탕을 둔 진정한 사회주의 정치를 대안으로 삼고 운동을 건설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조승희

환경을 지키려면 계급을 넘어서 단결해야 한다?

일본 핵발전소 사고 이후 세계 곳곳에서 반핵 운동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어마어마한 위험을 제거하고 지속가능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일부 환경운동가들은 기업과 국가 권력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들도 수용할 만한 온건한 대안을 내놓으려 한다. 계급 투쟁이 아니라 탈계급적인 ‘국민적’ 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순이게도 이런 국민적 운동은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요구한다. 핵발전소의 위험을 피하려면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생활 수준을 떨어뜨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영국의 사회주의자인 에스텔 쿠치는 이런 주장들의 약점을 지적한다.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환경 문제를 걱정한다. 기후변화 회의론자들이 무척 노력했음에도 사람들은 기후변화가 세계 곳곳에서 재난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일부 환경주의자들은 지구온난화가 워낙 거대한 문제라서 다른 모든 걱정들은 부차적이라고 주장한다.

지구가 멸망하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나 인종차별주의나 전쟁에 맞선 투쟁이 다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다.

또 기후변화는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계급과 관계없이 누구나 기후변화를 멈추는 데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지구를 구하려는 운동에 헌신한다고 해서 진정한 변화를 이룰 힘을 가진 세력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부자들은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한 행동과 어긋나는 특수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급을 뛰어넘어 단결하려는 시도는 투쟁을 약화시킬 뿐이다. 그것은 권력자들에게 도전하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가능하게 만들 투쟁이 옆길로 새게 한다.

지배계급은 환경을 놓고 모순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어떤 자본가들은 기후변화 때문에 자신들의 체제가 기반을 두고 있는 환경이 위협받는다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어떤 자본가들은 환경 문제의 해결책으로 이윤을 획득한다. 재생가능에너지로 돈을 버는 자본가들이 그 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근본은 이윤 축적이다.

개별 자본가의 관심사나 환경보호는 부차적이다.

지배자들은 자본주의를 현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어마어마한 압력을 받는다.

석유, 석탄, 핵, 자동차 기업 등 거대한 오염 산업들은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다.

그들은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은 보수당을 녹색대단인 것처럼 덧칠하려 한다.

보수당이 감히 이런 ‘녹색 분칠’을 할 수 있는 것은 환경 운동의 지지 기반이 무척 광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수당은 지구를 더한층 파괴하는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것은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한 어떤 진지한 행동도 기업 권력과 그 뒤를 따르는 국가와 대결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뒤집기

일부 환경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체제 내에 존재하는 이 어마어마한 벽을 보고는 방향을 돌려 버린다.

실행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사람들이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결론을 내린다.

그들은 우리가 재활용을 해야 하고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구를 가장 많이 파괴하는 것은 거대 기업들과 정부들이다. 노동자들은 이들을 통제하지 못한다.

개인이 자기 집에 소형 풍력 터빈을 달 수 있지만 그래 봐야 눈곱만큼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



121주년 세계노동절 민주노총 기념대회 “노동자들에게 좋은 것이 지구에게도 좋다”

을 뿐이다.

그러나 정부가 핵발전예 쏟아붓는 보조금 수십억 파운드를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하면 훨씬 거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일부 환경주의자들은 더 큰 희생을 원한다.

그들은 개발과 성장 자체가 ‘기후 혼돈’의 원인이라고 말한다.

어떤 이는 심지어 모든 개발이 지구에 해롭기 때문에 결국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처럼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발 자체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개발이 문제다.

개발 덕분에 오늘날 세계는 모든 이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잠재력을 가지게 됐다.

산업 발전과 신기술은 실제로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단을 제공해 줬다. 재생에너지 개발이나 더 효율적인 운송수단 같은 것들 말이다.

체제가 이윤을 위해 조직되기 때문에 이런 잠재력들은 낭비된다.

개발을 피하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혼돈에 맞서 지속가능한 세계를 건설하려는 투쟁을 회피하는 것이다.

지구온난화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다. 지구온난화에 맞서 싸우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더 개선하는 투쟁이다.

우리는 지배자들을 쥐어짜서 일부 개혁을 얻어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지구를 구하는 조처에 맞설 수밖에 없는 강력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노동자들이 통제하는 민주적인 사회라면 기후변화를 멈추는 것은

훨씬 쉬울 것이다.

우리는 이윤 경쟁에 의해 움직이는 자본주의 체제를 모든 이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집단적으로 조직되는 사회주의 체제로 갈아 치워야 한다.

그러려면 단순히 환경파괴에 맞서 싸우는 것이상이 필요하다.

새로운 사회를 만들 세력[노동자 계급]에게 눈을 돌려야 한다. 노동자들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도록 돕는 모든 투쟁을 지지해야 한다.

번역 장호중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추천 소책자

2011년 개정판

기후변화

왜 핵발전은 대안이 아닌가



마틴 엠슨 지음
최수진, 한성근 옮김
다함께 발행
3,000원

구입 문의 : www.alltogether.or.kr
02-2271-2395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금융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베테랑 자본주의 옹호자들은 세계 경제 금융 위기가 이미 끝난 것으로 선언하고 싶을 것이다.

4월 24일 <파이낸셜 타임스>는 금융시장에서 투기 활동을 벌여 큰 이윤을 번 헤지펀드들이 지금 2조 달러가 넘는 돈을 굴리고 있다고 말하며 이렇게 보도했다. “[헤지펀드들은] 위기 직전인 2007년 1조9천3백억 달러의 고객 투자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던 수준을 뛰어넘어 사상 최대의 자금을 굴리고 있다.”

“경제 위기 발생 후, 폴슨 사, 브레번 하워드처럼 창립자와 고객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인 회사들은 헤지펀드 특유의 도취 분위기에서 한 걸음 물러서기는 커녕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됐다.”

사실, 상황은 이 기사가 암시하는 것보다 훨씬 암울하다. 2008~2009년 세계적 불황 국면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서로를 상쇄할 가능성이 있는 두 가지 움직임 덕분에였기 때문이다.

첫째는 중국의 성장이다. 중국 지배자들은 여전히 국가를 통해 은행을 집단적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금융시스템을 뒤흔든 미친 투기 활동을 억제할 수 있었다. 그들은 은행들을 통해 주로 투자자금을 융자해주는 형태로 경제에 1조달러를 퍼부었다.

덕분에 중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재개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브라질이나 남아공같이 중국에 원재료와 식량을 수출하는 나라들의 경제도 부양할 수 있었다. 또, 독일이 지난달 중앙은행 총재가 “강한” 회복세라고 부른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도 중국에 첨단 제조품을 수출하는 구실을 한 덕분이었다.

그러나 중국 호황의 놀라운 활력 자체가 불안정성을 감추고 있다. 중국 정부가 퍼부은 돈은 부동산 거품을 낳았다. 현 중국 상황은 애초에 미국과 유럽에서 경제 위기를 낳은 것과 위험할 정도로 비슷하다.

게다가, 식량과 원재료에 대한 중국의 만족을 모르는 욕구는 1차 상품의 가격 폭동에 일조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유가가 지난해에 비해 35퍼센트 이상 상승하면서 배럴당 1백 달러대를 회복했다. 그러나 IMF 상품지수를 보면 유가뿐 아니라 2010년 중반부터 2011년 2월까지 1차 상품 가격이 평균 32퍼센트 상승했다. 그 결과 식량 가격이 뛰면서 아랍 혁명을 발생시킨 요인 중 하나가 됐다.

물가와 연관된 좀더 파란만장한 얘기를 하자면, 버락 오바마 재선 캠페인은 고유가에 대한 불만 덕분에 시시하게 출발해야 했다.

지난달 중국의 물가상승률은 32개월 내 최고인 5.4퍼센트였다. 연료 가격과 항만 사용 비용이 증가한 것에 대한 분노 때문에 최근 상하이 트럭 운전자들은 중국 최대항인 상하이 바오산항을 봉쇄했다.

최근 이런 갈등은 지난해 폭스콘의 초대형 부품 공장에서 발생했던 노동자 자살 사고와 일본인 소유 자동차 공장에서 발생했던 파업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갈등 때문에 중국 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선진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선진국이 더는 중국을 영원한 저가 공산품 천국으로 여길 수 없음을 의미한다.

중국은 물가인상 수출국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의 신자유주의 정설을 보면, 물가상승을 바로 잡는 흔한 방법은 이자율을 높여 경제 활동을 억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세계 경제 회복의 두 번째 축—중앙은행의 금융시스템 지원—을 뒤흔들 것이다.

2008년 금융 위기 발생 뒤부터 미국, 영국과 유로화 지역에서 이자율은 0이거나 0에 가까웠다. 미국 경제 회복이 더딘 덕분에 지난해 11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또 한 번의 ‘양적완화’(QE2)를 발표했다. 즉, 미국 중앙은행이 미국 정부 발행 채권을 사들인 것인데, 이것은 현대 전자 시대에 돈을 찍는 방식이다.

이제 금융시장은 이자율 상승을 바란다. 이번 달 초 유럽중앙은행은 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QE2는 올 6월이면 끝날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대다수 유로화통용권 나라들의 경기 회복은 여전히 상당히 취약하다. 금융시스템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준 국가 개입을 줄이는 방식으로 물가상승에 대응하는 것은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거나 심지어 역전시킬 수도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이다. 오는 7월 21~24일에 열리는 맑시즘 2011연사로 방한할 예정이다.

서평 | 《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 돌베개, 2011.

정의로운 자본주의 국가가 가능할까



국민참여당 유시민의 새 책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정부를 오랫동안 경험한 한국에서는 인기 없을 국가라는 주제를 다룬 책으로서는 이례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큰 관심이다.

그 요인은 우선 유시민이라는 인물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1980년대 후반 진보적 대학생치고 유시민의 ‘항소 이유서’를 읽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처음 국회의원으로 당선한 2003년 4월, 캐주얼 차림으로 등원해 보수적 국회의원들을 조롱하던 모습을 보며 통쾌해 했을 사람도 꽤 많을 것이다.

더 큰 요인은 지금이 이데올로기적 전환기, 또는 혼란기라는 점일 듯하다. 2008년 자본주의 심장부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로 세계가 출렁일 때, 그 전 30년 가까이 특세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도 함께 흔들렸다.

작은 정부가 최선이란런 주장은 쏙 들어가 버렸고 다시 국가의 구실이 각광받기 시작했다. 국가 개입을 강하게 주장하는 케인스주의자 장하준의 책이 선풍적 인기를 누린 상황을 본다면 《국가란 무엇인가》의 성공은 예정돼 있었는지도 모른다.

유시민은 ‘진보적 자유주의’를 지향한다고 설명한다. 진보적 자유주의 국가론은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의 토대 위에… 목적론적 국가관(칸트)을 결합한 이론”이다. 이는 이 책의 부제 “국가로 하여금 정의를 세우게 하라” 하는 말로 집약된다.

그는 한때 사회주의자들의 지지를 받기도 한 칸트를 부활시켜 자유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국민참여당 존재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려 한 듯하다.

그러나 유시민의 진보적 자유주의로는 아무래도 노무현 정부의 한계를 제대로 넘어서지는 못할 것 같다. 고전적 자유주의의 이념(자유·평등·박애)에 정의(定義)를 더했지만 자유주의 자체의 한계가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유시민은 자유가 중요하다면서 마르크스주의가 평등만 강조하고 자유를 무

시한다고 비판하지만 이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다.

마르크스는 어떤 자유주의자보다도 자유를 더 중시한 인물이다. 마르크스는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두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체”를 추구했다.

마르크스가 자유주의를 비판한 것은 자본주의 질서 내에서는 자유주의의 이념이 충분히 구현될 수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노동자에게는 착취당할 자유는 있지만 착취당하지 않을 자유는 없다. 자본가의 착취에서 벗어났을 때 그를 기다리는 것은 빈곤과 절망 뿐이기 때문이다.

자유와 평등

유시민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을 빌어 정의를 “각자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자유와 마찬가지로 정의도 계급으로 나뉜 사회에서는 온전히 구현될 수 없다. ‘정의를 실현하자고 외치기 전에 ‘누구의 정의인가’를 묻는 것이 올바른 출발점이다.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의 점거 파업을 떠올려 보자. 당시 쌍용차 공장에서는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두 가지 이해관계가 충돌했다. 해고를 막아 생존권을 지키려는 노동자들과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새로운 매각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자본을 지키려 한 경영진의 이해관계.

이명박 정부는 살인진압은 자본가들에게는 “각자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조치였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정반대의 결과를 뜻했다.

유시민이 비판하려 한 마르크스는 국가를 본질적으로 지배계급의 도구로 봤다.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한 곳에서는, 정확히 말하자면 계급투쟁에 어느 정도 이상으로 발전하기 전까지는 이 점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지만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주의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노릇을 한다.

국가의 요체는 관료제와 상비군이다. 이 집단은 선출되지 않고 대중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인물들로 구성돼 있다. 계급 질서가 흔들린다고 판단될 때는 어김없이 이 집단이 나선다.

가장 비극적인 사례는 1970년대 초 칠레의 경험이다. 당시 피노체트를 중심으로 한 칠레 군부는 선거를 통해 당선한 아옌데 정부를 타도했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진정한 자유와 정의를 쟁취하려면 기존의 자본주의 국가를 타도하고 그 자리에 대중이 아래로부터 건설한 대안적 권력 기구를 세우야 한다. 마르크스는 1871년 파리 코뮌을 보고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이를 두고 유시민은 마르크스주의자



2009년 범국민대회 경찰폭력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가를 장악하고 있다. 개혁을 이루려 해도 아래로부터 대중운동의 힘이 중요하다.

들과 ‘혁명주의자’들이 사회혁명에만 관심을 보이고 “보수 정파와 자유주의 정파의 정치적 대결에 냉정하고 관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공격한다.

그러나 파시즘에 맞서 가장 일관되게 싸운 것도 당대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었다는 점만 떠올려 봐도 유시민의 주장이 근거없는 비난임을 알 수 있다.

진정한 권력이 선출되지 않는 자들에게 있다는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은 의회장악이나 대통령 당선만으로는 체제 내에서 개혁을 이루는 데서도 한계에 부딪히게 마련이라는 귀중한 교훈을 준다.

이를 극복하려면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이 필수적인데 유시민이 진보적 자

유주의론으로 두둔하려 하는 노무현 정부의 실패가 이를 잘 보여 준다.

노무현 정부는 한편으로는 대중의 개혁 염원을 충족해야 한다는 압력,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적 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압력 속에 끊임없이 동요하다 결국에는 이렇다 할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좌초했다.

선출되지 않는 권력

여기에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하나는 우파와 지배계급 주류의 반발이다.

그들은 노무현 정부 집권 초기부터 반발했다. 알량한 개혁 조치에도 참지 않았다. 대통령 입에서 “이 정도면 막 가지는

‘정의를 실현하자’고 외치기 전에 ‘누구의 정의인가’를 묻는 것이 올바른 출발점이다.

거지요” 하는 말까지 나왔다.

결정판은 2004년의 대통령 탄핵 시도였다. 집권 1년여 만에 대통령을 날려버리기로 결심한 것이다. 노무현은 이런 반발에 무기력하게 굴복했다.

유시민은 노무현 정부의 좌초를 두고 힘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노무현의 후퇴와 우경화는 주체적 선택이기도 했다. 이것이 둘째 요인이다.

탄핵 시도에 맞서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와 우파의 준동을 저지하고 노무현에게 다시 힘을 실어 줬다. 뒤이은 총선에서 노무현 정당이라 할 수 있는 열린우리당은 국회에서 다수파가 됐다.

노무현 정부가 대중의 힘을 바탕으로 개혁을 추진하려 했다면 우파를 효과적으로 제압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같은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을 수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자신을 제거하려 한 자들보다 자신을 구해준 운동과 더 거리를 두려 했다. 되레 노동자·민중의 염원을 짓밟았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구속된 노동자가 1천 명이 넘는다. 거의 이틀에 한 명씩 구속한 셈이다. 그 중 대다수가 비정규직 노동자다. 정부의 탄압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가 열 명이 넘었다.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보내자”던 노무현 정부는 결국 국가보안법의 토씨 하나 바꾸지 않았다. 되레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국가보안법 관련 구속자가 1백40명이 넘었다.

국가보안법 개폐가 전국적 쟁점으로 떠올랐을 때 ‘자유주의자’ 유시민은 한나라당과 연정을 추진하면서 국가보안법 문제를 2~3년 미룰 수 있다고도 했다.

대중의 삶에 큰 악영향을 미칠 한미 FTA를 폭압적으로 추진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한마디로 노무현 정부는 거듭 거듭 “좌측 압박이 커고 우회전했다.”

노무현 정부의 거듭된 배신과 우경화 행보는 우파의 입지를 강화해 줬고, 이것이 우파의 부활과 이명박 정부의 등장으로 이어진 것이다.

유시민은 막스 베버를 인용하며 책임 윤리를 강조한다. “정치인은 결과로 책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에 대해 성찰하지 않으면서 “책임” 운운하는 것은 공허하다.

차승일



부족한 보육금 지원보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 우선이다

4·27 재보선 참패 직후, 정부는 만 5세 어린이 ‘의무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보육료 지원을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고 액수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이전보다 나아진 점이 있긴 하지만, ‘무상’이라고 할 순 없다. 어린이집들은 정부가 책정한 돈 이외에도 웃돈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 보육료는 월 평균 31만 원이나 된다. 그런데 정부가 당장 내년에 보조해 주는 돈은 20만 원에 그치고, 단계적으로 지원금을 늘려 나간다는

해도 보육료가 그만큼 인상되면 학부모의 부담은 계속 남는다.

게다가 정부는 내년부터 보육료를 현재의 1.5배(약 72만 원)까지 인상할 수 있는 ‘자율형 어린이집’을 허가하기로 했다. 지금도 민간 어린이집들은 이윤 추구를 위해 보육비 상한선을 지키지 않는데, 이제 보육비 인상 경쟁을 정당화해 주는 날개까지 단 셈이다. 이것은 부자 아이들만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 것이고, 보육비가 가구소득

의 13퍼센트나 되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

공공형 어린이집

정부는 올해 7월부터 ‘공공형 어린이집’도 도입하려 한다. 사립 어린이집이 인증을 통과하면 인건비와 보육료를 일부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형 어린이집’의 미래는 그 모델인 ‘서울형 어린이집’을 보면 알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년간 ‘서울형 어

린이집’을 도입했으나, 부모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들어가려고 ‘줄서기 경쟁’을 하는 현실도, 보육 교사들이 하루 평균 12시간을 근무하고도 월 1백20만 원을 받는 끔찍한 현실도 여전하다.

심지어 일부 시설장들은 유명 교사를 채용하고 수용 인원을 초과하는 영유아를 받아들이면서 이중 장부를 만들었고, 인건비·식비·시설투자비를 줄여 잇속 챙기기에 바빴다.

이런 문제는 “지원만 국공립 수준으

로” 하되, 운영권과 인사권은 여전히 시설장에게 주고 있는 데서 비롯한다. 결국, 세금 들어 사립 어린이집의 영리 추구만 도운 셈이다.

지난 4년 동안 보육 부담은 24퍼센트나 증가했지만 국공립보육시설 예산은 급감해 왔다. 이윤 추구의 압박을 받지 않고 값싸고 질 좋은 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대안이다.

소은화

심야노동은 노동자의 삶을 갉아먹는 악마다

처음 기아차에 입사할 때 주야간 노동에 대해 생각조차 해 보지 않았 습니다. 단지 좀 힘들다는 것과 남이 잘 때 일해야 한다는 불편함 정도였 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심한 속 쓰림과 위장장애가 나타났습니다. 수 시로 내시경 검사를 했고, 약을 타다 먹었습니다. 몸무게는 54킬로그램까 지 빠져 피골이 상접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일했습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았습니 다. 구름 위 에 떠있는 듯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 다. 가끔 눈앞이 뿌옇게 보였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잠이 오질 않았습 니다. 밤을 꼬박 새고 출근하는 날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잠을 계속 못 자다가는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병원을 찾아가 진단을 받았는데 불안장애라고 했습 니다.

생각이 점차 ‘심야노동 때문이 아닐 까’ 하는 쪽으로 옮겨갔습니 다. 야간 노동을 쉬면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의 사의 말을 듣고 그날부로 상병휴직을 했고, 연월차 휴가를 모두 사용해 실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쉬었습니다.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증상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악의 도움 을 받지 않아도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복귀하면서 상태는 다시 원 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노동조 합 전임자로 일하게 됐습니 다. 3개월 만에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 다.

산업재해

그 후 현장에 복귀해 다시 주야간노 동에 들어가자 서서히 몸은 다시 예전 으로 돌아갔습니 다.

저는 이때 깨달았습니다. ‘심야노동 은 악마다.’

그리고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님 을 알게 됐습니 다. 저는 시간을 쪼개 인터넷을 뒤지고, 여기저기 수소문해 연구논문을 찾았습니다. 수면 관련 책도 읽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 다. ‘주야간교대근무에 따른 수면장애’ 는 산업재해다.’

저를 화나게 하는 것은 야간노동자 수십만 명 중 단 한 명도 산업재해로 승인받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는 대법원까지 간다는 각오로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수면-각성리듬장애 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 지공단의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판 결을 내렸습니다(그러나 불안장애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할 수 있다는 이유 로 패소처분을 했습니다). 이 사실이 언론에 발표되자 자본과 권력자 들은 항소했고, 국내 10대 로펌사 세 군데 를 지정해 변호에 나섰습니 다.

재판의 승패를 떠나 주야간노동자 가 얼마나 심각한 위험에 노출돼 있 는지 노동자는 알아야 합니다. 노동 조합은 주간2교대제를 요구하고, 생 산설비를 늘려 신규인원을 충원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해 야 합니다.

주간2교대제는 사회적 근무시스템 을 바꾸는 중차대한 문제고 자본의 큰 양보가 필요합니다. 결국 주간2교대 제 완성은 투쟁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 다. 따라서 현장의 전진한 활동가들 이 투쟁을 모아내고, 노동조합이 목 표를 완수하는 투쟁을 강도 높게 전개 해야 합니다.

장호철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선전실장

축약하지 않은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윤논리에 종속된 의료의 실상

중소 규모의 정형외과에서 일할 때 겪 은 일이다. 50대 중반의 한 노동자가 작 업 도중 유리판이 깨지면서 한쪽 어깨에 큰 상처를 입었다.

한 대학병원에서 보낸 환자였는데, 밤 내내 수혈을 해도 환자의 의식은 선명하 게 돌아오지 않았다. 응급 수술에 들어 갔지만, 결국 환자는 비슷한 규모의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숨을 거뒀다.

상식대로라면 이 환자는 애초 진료를 받았던 대학병원으로 이송해 여러 과의 의사들의 협진을 받는 것이 옳았지만, 병 원장은 환자를 보내 주는 “거래쳐”대학 병원을 난감하게 할까 봐 염려해 애초 진료받았던 대학병원이 아닌 중소병원 으로 환자를 보내 버렸다.

발을 크게 다친 80대 한 할머니는 포 천과 서울의 대학병원을 전전하다가 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폐휴지를 모으며 생

계를 유지해 왔던 할머니는 발을 잘 씻고 잘 말리면 나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병원에 왔을 때 이미 허벅지까지 염증이 올라와 있었다. 절단 수술을 해야 했지만 이름도 보호자도 말할 수 없는 치매 할머 니를 병원은 받아 주지 않았다.

대학병원은 환자의 필요와는 관계없 이, “처치 곤란”이라 문제가 될 것 같은 환자를 (그 병을 감당할 수 없는) 중소병 원으로 옮긴다. 가족들이 환자의 수술과 입원을 모른 척하거나 돈을 낼 수 없다면 환자는 이 병원 저 병원에서 천덕꾸러기 가 되고 만다.

환자는 돈이 있든 없든 치료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 “돈”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중요하게 봤다면 그 노동자와 할마니도 필요한 의료진의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김지현

유시민에게 :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항의 이유서’

오래전, 당신의 《거꾸로 읽는 세계사》를 재밌게 읽었고, 4·27 김해 재보선에서 한 나라당 승리에 분노하는 한 사람입니다. 얼마 전, 국가에 관한 책을 출판했더군요.

용산참사를 바라보며, ‘도대체 국가란 무엇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는 말에 심본 공감합니다.

당신은 국가를 ‘함께 속해서 공동의 선 을 이룩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좌절을 겪 었던 듯합니다. “실제 국가 운영을 해 본 입장이다 보니 참 괴롭더라. 분명 우리가 국가권력을 갖고 있는데,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다… 우리가 ‘국가’ 하면 ‘정부’ 아 니나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컴퓨터와 비교하면 정부는 일종의 운영 시스템이고, 그 토대가 되는 하드웨어가 있는 것 아닌가.”

당신이 이 말을 한 인터뷰에서 박명림 교수는 “국가가 건드리지 못하는’ 영역 으로서 재벌·종교·재산·언론·교육 의 상층 영역’에 대해 얘기했고, 당신도 이런 것들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자연스럽 습니다. “국가는 ‘상하층 영역’의 분리를 은 폐하고, ‘상층 영역’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 한 군사적(군대와 경찰)·평화적(의회제도 등) 수단이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폄하한 마르크스 국가 정의의 출발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사회투자국가론이 신 자유주의 국가론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 한 당신 자신의 답변을 보면, 당신은 별 로 ‘상층 영역’을 강제해 복지를 확대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직업으 로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내 논리가 아무리 옳으면 뭐 하나, 실현을 못 하면 책임지지 못하는 거다.”

이제 당신이 어느 곳에서 훌륭한 국가 를 찾았는지 보겠습니다. “서유럽 국가 들이 훌륭하더라. 복지국가론도 다루고 있다. 대한민국은 괜찮은 국가인데 훌륭 하다고까지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지난 3월 26일 ‘훌륭한 서유럽 국가’ 영국에서는 그 나라 역사상 가장 거대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부 가 추진하는 교육, 의료 등 복지 삭감에 항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그림은 ‘괜찮은 국가, 대한민국’ 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2월 8일 강원 강릉에서 번개탄을 파운 뒤 숨진 ㄱ씨(23). 그가 혼자 살던 원룸에서는 여러 장의 족석복권과 학자 금 대출 관련 서류가 발견됐다.”

이런 오늘이, 1985년 당신의 《항소이 유서》가 말하는 ‘5월’에 비해, 정말 ‘괜찮’ 아진 겁니까? 당신 말처럼 국가가 컴퓨 터의 토대가 되는 하드웨어고 정부가 그 것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라면, 정부 장 악은 사실상 국가권력 장악과 전혀 다른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소프트웨 어가 하드웨어를 바꿨다는 말은 들어보 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김대중·노무현 10년 동안 경험했던 것, 그리고 지금 미 국 사람들이 버락 오바마 정부를 통해 경 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유정

“복지는 기만”일 뿐인가?

4월 30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4·30 투쟁 결의대회’에서 전국학생행 진(이하 행진) 경향의 활동가는 다음과 같은 골자로 발언했다.

“독일에서는 사회주의자 탄압법을 휘 두른 비스마르크가, 한국에서는 독재 자 박정희가 복지 제도를 도입했음을 볼 때 복지는 기만이다. 현재 한국 노동 자·민중에게는 노동권이 중요하고 저 임금·불안정 노동을 해결해야 한다.”

학생행진이 메이데이를 앞두고 발행 한 글들에는 다음과 같이 요약돼 있다. “저임금과 고용 불안 해결 없는 복지는 기만이며 우리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길(진정한 복지)은 최저임금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다.” “복지? 빚 좋 은 개살구!”라고도 했다.

그러나 복지는 고용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 설사 저임금과 고용 불안 을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라 할지라도 “기 만”이라고 낙인찍는 것은 과하다.

사람들은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위

에도 높은 의료비와 교육비 부담 등에 시 달린다. 그런 고통 중 일부라도 덜 수 있 다면 그것은 이익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상급식 정책에 큰 지지를 보내는 것이 다.

엄밀히 말해서 저임금·불안정 노 동 해결이 복지 확충보다 더 급진적이 거나 근본적인 요구인 것도 아니다. 둘 다 필요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둘 다 해결할 수 있는 재원이 있다. 둘 중 하나만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설 득력이 없다.

평혜

행진이 무리하게 두 요구를 대립시키 는 데에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 복지 운동 내 일부가 복지를 대가로 고용 안정 을 해치는 ‘유연안정성’ 정책을 일부 수 용하고, 이런 요구를 매개로 민주당 같은 자본가 정당과 동맹을 추구하는 데 대한 비판적 의식이 작용한 듯하다.

나도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전략에

매우 비판적이므로《마르크스21》7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이론과 실천’ 참 고) 행진의 주장에 이해할 만한 구석이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견해 가 복지 운동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 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운동만 보더라 도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양보론은 다 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정 단체의 견해를 비판하는 데서 너 무 나아가 운동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고 무엇보다 광범한 피억압 대중의 바람을 폄하하는 것은 스스로 대중 운동에서 멀 어지게 만드는 효과만 낼 것이다.

그것도 전혀 온당치 않은 이유로 말이 다.

복지 확대를 바라는 광범한 대중 속에 서 올바른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복지 운 동이 좀더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을 추구하는 운동으로 발전하도록 돕는 것 이 진정한 좌파의 과제다.

차승일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다함께 공개포럼에 초대합니다!

주최 다함께

www.alltogether.or.kr

- * 웹사이트에 포럼 일정을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 * 참가비는 장소 대여 등에 사용됩니다.

다함께 서울 동부 공개 포럼

한국에서 복지국가가 가능한가?

연사: 차승일 《마르크스21》편집팀원

일시: 5월 11일 (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웹사이트 추후 공지

참가비: 3천 원 (학생 2천 원)

문의: 02-447-0397, 010-9910-2021

다함께 서울 남부 공개 포럼

파리 코뮌 140주년 —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권력을 잡았을 때

연사: 이현주 《마르크스21》편집팀원

일시: 5월 19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모임전문공간 모토S실 (강남역 8번 출구 20미터 강남제일빌딩 8층)

참가비: 4천 원

문의: 02-416-0963, 010-2401-1987

다함께 서울 서부 공개 포럼

임금 인상 투쟁의 정치경제학 —

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지지해야 하는가?

연사: 박성환 (다함께 운영위원회)자 노동조합팀장)

일시: 5월 12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가톨릭 청년회관 CYC 4층 (홍대입구역 2번 출구)

참가비: 3천 원 (학생 2천 원)

문의: 02-324-3400

다함께 경기 남부 공개 포럼

핵 없는 세상은 가능한가?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 대안

연사: 장호중 《레프트21》기자, 기후정의 활동가)

일시: 5월 12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골든프라자 5층 대회의실 (수원역 앞 매산동 주민센터 옆)

참가비: 1천 원

문의: 010-6663-0032

다함께 서울 중북부 공개 포럼

여성 억압의 근원 — 여성은 왜 차별 받는가?

연사: 최미진 《레프트21》기자, (낙태, 여성이 선택할 권리(다함께 공저자)

일시: 5월 19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대학로 한성대 에듀센터 807호 (혜화역 4번 출구, CGV 옆 건물)

참가비: 2천 원 (음료 제공)

문의: 070-8113-8541, 010-8033-7822

대학생다함께 마르크스주의 포럼

충청지역 대학 마르크스주의 포럼

핵 없는 세상은 가능한가?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 대안

연사: 장호중 《레프트21》기자, 기후정의 활동가)

일시: 5월 20일 (금) 오후 5시 30분

장소: 충남대학교 사회대 강의동 102호

문의: 010-2297-4258

다함께 서울지역 연락처

서울 동부지구

연락처: 02-447-0397 atge@paran.com

http://blog.naver.com/atgeforum

서울 광진구 중곡4동 93-49 2층

서울 서부지구

연락처: 02-324-3400 atgwestmail@gmail.com

http://blog.naver.com/atgwestforum

서울 마포구 동교동 174-14번지 3층

서울 남부지구

연락처: 02-416-0963 atgsouthmail@jinbo.net

http://blog.naver.com/nambu_forum

서울 송파구 삼전동 7-1 402호

서울 중북부지구

연락처: 070-8113-8541 jballtogether@gmail.com

http://blog.naver.com/atgjbforum

서울 종로구 송인2동 201번지 13호

Report@left21.com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5월 16일(월)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이화여대

1천5백여 명이
두번째 학생 총회를
발의하다

이화여대에서 두번째 학생총회가 준비되고 있다. ‘총회를 호소하는 이화인들’이 1천 5백30명의 서명을 받아 총회를 발의했다.

이화여대 학생들은 등록금을 인상한 학교 당국에 맞서 지난 3월에 2천 명이 넘게 모여 총회를 성사했다. 개교 이래 처음으로 1주일 간 채플 거부 운동도 벌였다.

투쟁의 압력 때문에 학교 측은 장학금 인상, 교육환경 개선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제기한 등록금 인상 철회는 “절대 안 된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이런 학교 당국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은 상당하다. 총회를 호소하고 있는 성지현(다 함께 이대모임 활동가, 정치외교, 4학년) 씨는 학생들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원래 2백 명을 채워야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딱 1시간 동안 3백50명이 줄을 서서 서명했어요. 분위기도 매우 좋았어요. 강의 실 방문을 했는데 1학년 학생들에게 박수도 받았어요. 학생들의 불만이 높고 싸워보자는 의지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학교 측의 양보안 수용 여부를 묻는 총투표에서도 66퍼센트에 달하는 학생들이 양보안을 거부하고 투쟁을 지속하자고 의견을 냈다. 아쉽게도 미흡한 준비 때문에 투표율이 27퍼센트밖에 안 돼 총투표가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말이다.

반갑게 총학생회도 최근 학생들이 발의한 총회를 열의있게 준비하기로 했다.

이제 실제로 총회를 성사시키고 등록금 인상 철회를 이루려면, 학생들의 불만을 조직해 학교를 실질적으로 압박할 행동을 발전시켜야 한다.

동력이 있을지 걱정하며 자꾸 뒤를 돌아볼 것이 아니라, 투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을 결집시키고 이 힘으로 투쟁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지현 씨는 “학교를 실질적으로 압박하려면 점거 농성이 필요하다”며 “총회가 공고되면 다함께 이대모임이 점거 농성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영

현대차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한 4월 30일 투쟁 집회. 정규직 노조는 이런 요구를 결코 싸워야 한다.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임금 인상을 요구해야

현대차 노조 대의원대회가 휴회돼 보름이 지났는데도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이경훈 집행부는 대의원대회를 휴회한 이유를 일부 현장조직과 대의원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들이 ‘백화점식 요구안을 상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현장조직과 대의원 들의 임금성 단협 요구안(퇴직금 문제 등) 제출은 정당하다. 오히려 이경훈 집행부가 “쟁취 가능한 요구안”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열망을 충분히 받아 안지 않은 것이 문제다.

올해 현대차 노조의 타임오프 저지 투쟁과 임단투(임금·단체협약 투쟁)는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것 같다. 현대차 부회장 윤여철도 “올해가 임단협 역사상 가장 힘든 해가 될 것”이라며 “기아차처럼 전임자 임금 보전을 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조선일보〉도 ‘임금 동결’을 주문하고 나섰다. 차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도 임금 인상 자제를 요구하는 것은 현대차의 투쟁이 상반기 임단투에 미칠 파장을 차단하려는 속셈이

다. 현대차 노조는 저들의 바람을 무너뜨려야 한다.

한편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 요구안’이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채용 특혜’ 요구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더라도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는 요구다. 사측의 탄압으로 해고자가 늘어나고 있고 아산 비정규직 지회 천막이 짓겨지고 노동자들이 폭행당하고 있는데 이런 요구는 노동자들을 좌절케한다.

이경훈 집행부가 대의원대회 휴회 후 채용 특혜를 옹호하는 성명서까지 발표한 것을 보면 스스로 철회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민주파 현장조직들과 활동가들은 채용 특혜 폐지를 적극 주장하고 설득해 속개될 대의원대회에서 폐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경훈 집행부와 다른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

또 타임오프 저지를 위한 파업을 결의하는 데 구실을 한 만큼,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제출해, 미적대는 이경훈 집행부를 압박해야 한다.

모승훈

고려대

열의 있는 학생들로 등록금 투쟁 지도부를 구성해야

“학교 측이 등록금 인상을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5월 12일 비상학생총회로 모입니다.”

고려대 학생들이 2차 학생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미 3월 31일 1천5백 명이 참가해 6년 만에 비상학생총회를 성사했고, 총장실 점거 농성도 한 달 넘게 진행했다.

투쟁에 밀린 학교 당국은 면학 장학금 10억 원을 확충하고 졸업식 한자 자격 시험 폐지, 영어강의 자율화 추진 등을 하겠다는 양보안을 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등록금 인상은 단 1퍼센트도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4월 25일엔 점거 농성 중인 학생들에게 ‘무한한 인내로 기다렸다’며 징계 협박 공문까지 불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두 배나 오른 등록금을 참아 온 학생들이야말로 인내심이 바닥이 날 지경이다. 한 달 넘게 농성장을 지킨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 철회를 바라는 학생들을 대변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 학교 당국에 영향을 받은 일부 학생회장들의 제



3·31 총회 전부터 점거 농성을 반대했던 중앙운영위원회는 투쟁 지도부로 자격이 없다.

기로 총장실 점거 농성이 중단됐다. 이 학생회장들은 ‘지금은 협상 국면’이라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농성 중단을 관철시켰다.

일부 과 학생회장 등 46명이 연서명해 중앙운영위원회 결정에 항의하고 총회준비단 회의에 참가한 문과대 학생회와 다함께 고려대 모임 등이 농성을 지속하자고 주장했지만, 총학생회와 학생행진 경향 활동가들은 ‘점거를 지속할 동력이 없다’며 반대했다.

물론, 점거가 대중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일부 활동가들의 헌신에 의존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등록금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없어져서는 아니다. 오히려 3월 31일 비상학생총회 이후 투쟁 동력을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한 게 문제다. 총학생회는 중앙운영위원회가 등록금 투쟁을 이끌어야 한다는 형식적인 생각에 집착하느라 총회 이후 제대로된 투쟁 계획을 내지 못했다.

그러나 고려대 중앙운영위원 중 다수는 비상학생총회 전부터 점거 농성을 반대했다. 학생회가 열의 있게 투쟁을 이끈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투쟁에 열의있는 학생들이 실질적인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

지난해 영국에서도 등록금 인상에 맞선 보수당사 점거를 주도한 것은 학생회가 아니라 투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었다.

1천25명이 2차 학생총회 발의를 위해 서명했듯이, 지금 투쟁을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존재한다. 활동가들은 이런 학생들을 대변해 투쟁을 지속·확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지금 인하대, 덕성여대 등에서 등록금 동결을 위한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등록금 투쟁을 지지하는 여론이 크다. 고려대 학생들도 실질적인 지도부를 구성해 비민주적인 학교당국을 비판·폭로하면서 투쟁을 지속해야 한다.

정선영

한국외국어대

민주주의의 상징
노천극장 철거를
막아내다!

박혜신 한국외국어대 중국어대 학생회장

한국의 국어대 학교(이하 외대)에서는 1987년 투쟁의 성과로 노천극장이 건설됐다. 이후 20여 년 동안 노천극장은 학생총회나 집회가 열리는 장소였고, 민주주의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 학교 측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노천극장이 철거될 위기에 빠졌다. 학교 당국은 안전상의 이유라며 지하 캠퍼스 건설을 위해 노천극장과 지하공간을 허물어야 하고, 그 자리에 제2도서관을 짓겠다고 했다.

하지만 중국어대 학생회는 노천극장을 없애는 것은 학교 당국이 민주주의의 상징을 없애고 학생 자치공간을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판단해 반대를 조직했다. 다함께 외대모임, 중국어대 학생회, 문예패, 총학생회가 노천극장 철거에 반대하는 대자보를 학내 곳곳에 게시했다.

애초에 학교 측과 총학생회는 노천극장 철거 문제를 노천 지하 동아리들만의 문제로 한정시키려 했다. 그러나 중국어대 학생회와 다함께 외대모임은 대책위를 중앙운영위원회 대표자들까지 포함하는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관련 대표자들이 모두 모여 ‘노천극장 철거 계획 철회하라’는 요구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또 총학생회와 면담에서 기획조정처장이 ‘안전 문제는 없다. 단지 오래된 노천극장은 외관상 좀 그렇다’고 말해 학교의 기만적인 태도도 드러났다.

이후 대책위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서명운동 첫날 학교 측과 학생 대표자들이 면담을 했다. 설전 끝에 학교 측은 ‘학생들이 원한다면 철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통쾌한 승리였다. 최근 총장과 교수들의 공공유용 사건으로 학교 측이 궁지에 몰린 상황 때문에 신속하게 물러선 듯하다.

투쟁이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 학교 측은 낙후한 노천극장을 리모델링해야 한다. 노천 지하 동아리 공간배치도 학생들과 논의해야 하고, 제2도서관도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

비리 총장 퇴진하라

박철 외대 총장과 교수 등 80여 명이 4억 원에 달하는 비리를 저질렀다. 교육과학기술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박철 총장은 대외홍보비 중 1억6백만 원을 영수증도 없이 사용했다.

교수 69명도 수천만 원대의 학술연구비를 초과·골프·미장원·사우나·마사지 등으로 횡령했다.

박철 총장은 사과를 하기는커녕 ‘한해 예산이 2천억 원인데 1억 원은 작은 돈이다’고 말했다. 뻔뻔하게도 ‘노래방, 골프장 등에서 쓴 돈이다’는 말도 했다.

박철 총장에게는 몇 억 원이 얼마 안 되는 돈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등록금을 내느라 빚을 지고, 휴학을 하고, 일바에 시달리는 학생들에게는 총장과 일부 교수들이 저지른 비리가 정말이지 분통터지는 일이다.

학교 측은 다함께 외대모임이나 학생회장들에게 총장 비리 관련 투쟁을 자제하라고 협박·회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노천극장을 지켜낸 통쾌한 승리를 발판 삼아 총장과 교수들의 비리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중앙운영위원회도 만장일치로 총장 퇴진을 요구하기로 했다.

5월 17일로 계획된 전체학생총회에서 총장 퇴진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도록 점거 투쟁같은 방안을 결의해야 한다.

정성진 칼럼

초과이익공유제와 연기금 사회주의: ‘자본의 사회화’에서 ‘사회의 자본화’로?



정성진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마르크스주의 연구》편집위원장 / 《21세기 대공황과 마르크스주의》(책갈피)의 공저자

삼성의 이견희 회장은 지난 3월 말 재벌 기업의 초과이익을 하청 중소기업들과 나누자는 정운찬 전 총리의 이른바 초과이익공유제 제안에 대해 “누가 만든 말인지,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그런데 그 한 달 뒤인 지난 4월 말에는 MB의 책사 광승준이 “거대 권력이 된 대기업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삼성을 압박하자, 이견희는 “공개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환영한다”고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다.

친재벌, ‘기업 프렌들리’ MB가 정권 말기가 되자 ‘공정사회’와 ‘동반성장’ 노선으로 선회한 것일까? 초과이익공유제와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어떻게 다르기에 이견희는 이들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을까? 정운찬이 제안한 초과이익공유제는 오래전부터 자본 자신도 기업 성과 향상 방안으로 도입 시행해 온 이윤분배(profit sharing)의 한 방식이다.

다만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의 이윤을 중소기업에게 나누어 주자는 기업 간 이윤 재분배 방안으로서, 자본의 이윤을 성과급 임금 지불을 통해 노동자와 나누어 분배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원래의 이윤분배 제도, 즉 기업 내의 계급 간 이윤분배와는 다르다. 하지만 초과이익공유제는 자본 상호간의 이윤분배이기 때문에 계급 간 분배인 본래적 의미의 이윤분배보다 더 분배적이고 더 반자본적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한편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소액주주운동 등 시민운동뿐만 아니라 일부 진보진영에서도 이른바 ‘연기금 사회주의’

구상의 한 요소로서 신자유주의 시대의 대안적인 진보적 경제전략의 하나로 간주돼 왔다. 실제로 광승준의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예컨대 현재 국민연금의 삼성전자 지분이 5퍼센트로 이견희의 지분(3.4퍼센트)보다도 많은 점을 감안한다면, 재벌 기업의 경영권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급진적인 ‘연기금 사회주의’ 구상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견희가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반발하면서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환영한다고 한 것은 좌우도 구별 못하는, 혹은 정운찬의 주장처럼, 경제학의 기본도 모르는 무지를 드러낸 것일까? 또는 밖에서는 애플한테 터지고 안에서는 심화되는 빈부격차와 대기업-중소기업간 양극화, 격화되는 지배계급 내부 갈등과 여론 악화에 몰려 좌충우돌하고 있는 것일까? 세계 최정상급 싱크탱크라는 삼성경제연구소까지 거느리고 있는 이견희가 그렇게 단순 무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무지

코즈(R.Coase)에 따르면 자본주의 경제는 위계적 명령 조직인 기업이라는 섬과 이 섬들 간의 시장 교환이 이루어지는 바다에 비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윤이 생산되는 장소인 기업, 즉 섬 안에서는 교환이 아니라 자본의 전제가 지배한다. 반면, 기업, 즉 섬들 간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장, 즉 바다에서는 이윤의 재분배가 이루어진다. 시장에서 이윤의 재분배는 기업 간 경쟁과 이에 기초한 이윤을 균등화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낮은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이윤의 일부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높은 대기업으로 이전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등 발전, 양극

화도 이런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다.

원래 의미의 이윤분배는 대기업이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 착취를 통해 얻은 이윤과 중소기업이 취득한 이윤을 재분배한 것으로부터 얻은 이윤을 내부적으로 재분배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대기업에서 임직원들에 대한 스톡옵션 제공, 노동자들에 대한 성과급 임금 지불과 우리사주제 등의 실시 등이 이에 해당된다. 자본은 이런 이윤의 기업 내 분배는 자본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 용인한다. 실제로 대기업은 이윤 극대화, 기업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이윤의 기업 내 분배를 앞장서 추진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운찬이 주장한 초과이익공유제는 기업 간 이윤 재분배, 즉 대기업이라는 큰 섬이 취득한 이윤의 일부를 다시 주변의 다른 작은 섬들, 즉 하청 중소기업들과 다시 나누자는 기업 간 이윤 재분배로서 동일 기업 내 이윤분배와 구별된다. 자본은 이와 같은 기업 간 이윤 재분배 요구에 대해서는 자본주의의 경제법칙, 즉 착취와 시장 경쟁을 통해 취득한 이윤을 다시 내놓으라는 제3자의 부당한 개입으로 여길 수 있다. 즉 자본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이윤의 기업 간 재분배나 자율적인 기업 내 분배는 자본의 논리와 부합되는 것으로 여기지만, 국가 개입에 의한 이윤의 기업 간 재분배는 시장 경쟁의 법칙을 거스르는 반칙으로 간주할 수 있다.

반면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요구는 다름 아닌 ‘1인 1표’의 원칙, 즉 주주자본주의 원칙의 명실상부한 실행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자본의 논리와 상충되기는커녕 자본의 논리의 철저한 관철 요구다. 따라서 일부 진보진영이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요구를 연기금 사회주의 구상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은 어떤 이론적 역사적 근거도 없다. 오히려 노동자의 지연된 임금인 연기금이 주식·채권 등 투자 확대를 통해 금융화 과정에 편입되는 것은 주주 자본주의 원칙을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의 강화로 귀결될 뿐이다. 이견희가 광승준의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요구를 환영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초과이익공유제가 대기업, 재벌의 이익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요구보다 더 진보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초과이익공유제는 이윤의 기업 간 재분배 요구로서 그 자체로 사회적 총자본, 자본 일반의 이익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노동자계급과 국가가 이윤의 기업 간 재분배 과정에 개입하여 이를 평등화, 민주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이는 자본의 논리를 넘어가는 대안적인 이행기 경제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다. 1970년대 스웨덴 사회민주당과 LO(노총)가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난 임금노동자 기금은 그 예다.

임금노동자 기금

실제로 마이드너(Meidner)가 입안했던 임금노동자 기금안에 따르면, 매년 스웨덴의 주요 기업들은 이윤의 20퍼센트를 각출해 신주를 발행하고 이를 임금노동자 기금에 적립하도록 강제됐고, 신규 발행 주식의 형태로 적립되는 임금노동자 기금은 머지않아 주요 기업들을 소유·관리하는 지배주주가 될 것이었다. 비록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이 스웨덴의 임금노동자 기금안이야말로 연기금 사회주의 구상과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운찬이 주장한 초과이익공유제에는 연기금 사회주의 구상의 기초가 되어야 할 노동의 관점, ‘자본의 사회화’

플랜은 완전히 빠져 있다.

한편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요구 역시 연기금의 금융화와 증권화, ‘노동의 자본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연기금 사회주의 혹은 ‘자본의 사회화’ 방안과는 거리가 멀다. 스웨덴의 경험이 보여 주듯이 연기금의 금융화, 증권화가 임금노동자 기금 플랜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거꾸로 임금노동자 기금안이 실패한 후 연기금의 금융화, 증권화, 즉 스웨덴 복지국가의 해체와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이 급속하게 진전됐다. 초과이익공유제가 자본의 사이비 사회화 방안이라면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요구는 자본의 전면적인 사회화 요구일 뿐이다.

삼성이 초과이익공유제에 반발했다고 해서 초과이익공유제가 뭔가 진보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오패인 것처럼,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혹은 같은 동전의 양면일 뿐인 소액주주운동, 즉 ‘시장 포퓰리즘’과 ‘저항의 시장화’ 현상을 연기금 사회주의 구상과 동일시하는 것도 몽상이다. 주식과 MBS, CDO, CDS 등 각종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확대를 포함한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즉 연기금의 금융화, 증권화는 실은 2007~2009년 서브프라임 세계경제 위기의 주요 촉발요인의 하나였다. 최근 우리 나라 일부 진보진영이 관심을 갖는 연기금 사회주의 구상은 서브프라임 세계경제 위기 후에도 글로벌 차원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연기금의 금융화, 증권화를 비롯한 ‘사회의 자본화’를 거부하고, 1970년대 스웨덴의 임금노동자 기금안과 같은 급진적이고 전면적인 ‘자본의 사회화’ 전략과 결부될 경우에만 탈자본주의의 이행기 강령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정성진 교수는 오는 7월 21~24일에 열리는 맑시즘 2011에 연사로 참여한다.

반자본주의 연재 ③

금융화와 금융자본만이 주된 문제인가?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한국에서도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같은 책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레프트21》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대안을 검토하는 연재를 싣는다.

- ① 자본주의는 왜 끔찍한 불평등을 낳는가
- ② 시장은 효율적인가
- ③ 금융화와 금융자본만이 주된 문제인가
- ④ 기후변화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 ⑤ 국가가 시장의 광기를 통제할 수 있는가
- ⑥ 왜 전쟁은 왜 끊이지 않는가

2008년에 시작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직접적 촉발점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붕괴였다.

금융 위기가 시작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위기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세계 각국에서 은행 위기가 계속되고, 이 위기가 그리스·포르투갈·아일랜드 등의 재정 위기로 옮겨가고 있는 것에서 보듯, 금융 위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기가 막히는 것은 전 세계를 투기판으로 만든 거대 은행들이 막대한 정부 지원으로 살아나자, 임원들에게 엄청난 보너스를 지급했을 뿐 아니라 규제 금융으로 취약해진 정부 재정을 빌미로 복지·임금 삭감 등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 주류 언론과 미국 의회조차 이번 금융 위기는 “일부 금융기관들의 탐욕, 어리석음”과 “정부 규제 실패” 때문이라고 인정한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한 이윤 추구로 세계를 망쳐 버리고 그 대가를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금융자본을 통제하길 바라는 것은 매우 정당하다.

그러나 이번 경제 위기를 온전히 금융자본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부족함이 있다. 금융자본의 탐욕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며, 탐욕에 눈이 멀면 어리석어질 수 있다는 것도 당연한 이치다. 문제는 금

융자본이 투기를 일으킨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얻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한국 진보진영의 상당수는 주주의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주주 자본주의’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예를 들어, 장하준 교수는 “배당금을 높이고, 자사주 매입을 늘릴수록 사내 유보 이윤은 줄어들고, 그에 따라 투자도 감소된다”고 말한다.

즉, 신자유주의 시대에 주주들이 많은 배당을 받아내 금융 부문은 비대해졌지만, 반대로 기업 투자가 줄어들고, 성장률이 떨어지고, 실업·비정규직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주주 자본주의’론은 금융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시대에 성장률이 떨어지고,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복지·임금이 삭감된 것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주주 자본주의’론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아니다. 기업들이 배당을 늘린 것은 사실이지만 사내 유보 이윤 또한 증가했다.

현재 미국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은 2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한국에 상장된 6백여 비금융기업의 현금 자산도 1백조 원이 넘는다. 한국 기업들의 부채비율도 1997년에 4백 퍼센트대에서 최근에 1백 퍼센트대로 급속하게 낮아졌다.

게다가 배당금 지급이 실물 부문에 투

자할 재원을 줄이는 것은 아니다. 높은 배당금이나 사내 유보 이윤은 금융기관에 보관되는 것이고, 금융기관들은 그 돈을 실물 부문에 대출해 수익을 얻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 시대에 기업과 금융기관이 보유한 돈은 늘어났다. 게다가 기업 투자를 촉진한다며 국가는 규제 완화, 부자 감세로 기업 투자를 유도했지만 부자들은 파생금융상품 등의 투기에 매달릴 뿐 생산적 투자는 기피했다.

이것은 실물 부문의 투자 감소와 금융 부문의 비대화라는 현상의 근본적인 이유가 실물 경제의 변화에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윤을 저하 경향

신자유주의 시대에 실물 경제에 대한 투자가 감소한 이유는 마르크스가 지적한 자본주의의 ‘이윤율 저하 경향’과 관련 있다.

많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이 밝혔듯이, 전 세계 자본주의는 1960년대 말 이후 이윤율이 떨어져 왔다.

복지·임금 삭감과 부자 감세 등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부자들의 이윤을 늘리려는 시도를 계속해 1980년대 이후 이윤율이 조금 올랐지만 1960년대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못했고 따라서 투자도 회복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윤율 하락이 실물 부문의 투자 하락과 금융 부문 비대화의 진정한 원인임으로 “각종 정책 수단(예를 들어 부자와 기업의 감세를 허용하는 대신 투자를 조건으로 제시)을 통해 부자들로 하여금 더 많이 투자하도록”(장하준) 해야 한다거나 금융자본을 통제하는 방법만으로는 경제 위기를 끝낼 수 없다.

또, 이윤율 하락이 경제 위기의 진정한 원인이라는 마르크스의 설명은 왜 세계 지배자들이 위기 탈출의 해결책으로 임금·복지 삭감을 핵심 정책으로 하는지도 설명해 준다. 임금·복지를 삭감해야만 이윤율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의 한계는 자본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자본 간의 경쟁은 생산력을 높이도록 만들지만 또 이윤율 하락도 낳는다. 자본주의에서 생산의 목표는 사람들의 필요가 아니라 이윤이기 때문에 이윤율 하락은 생산의 급작스런 중단, 대규모 기업 파산과 함께 실업·빈곤·비참함을 낳는 것이다.

금융자본에 반대할 뿐 아니라 생산이 이윤 추구에 종속되지 않는 사회, 다시 말해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사회를 만들어야만 발전하는 생산력을 인류의 복지와 번영을 위해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

강동훈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신문

〈레프트21〉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문의 02-777-2792 / left21@left21.com / www.left21.com
후원하기 계좌번호 (명목: 레프트미디어) 하나은행 296-910007-15804,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우리은행 1005-301-422382, 신한은행 140-008-401399, 농협 301-0010-1643-71
웹사이트(www.left21.com)를 방문하시면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레프트21

이집트에서 투쟁과 연대가 성장하고 있다

카이로에서 찰리 킴브 영국 사회주의자

이집트 노동자들이 투쟁과 연대의 날로써 메이데이를 되찾았다.

석달 전 혁명으로 쫓겨난 친서방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 통치 아래 메이데이는 가짜였다.

친정부 ‘노조들’은 노동계급을 억압하고 무자비하게 착취하는 무바라크 정권을 찬양하곤 했다.

그러나 이집트 혁명은 이 모든 것을 바꿨다.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에서 열린 메이데이 시위에서 국가, 사장, 심지어 NGO들로부터도 독립적인 신생 노조들에 속한 노동자 수천 명이 행진했다.

이 날 참가자 중에서 세무공무원 노조는 혁명 이전에 결성돼 독립 노조 운동이 발전하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구실을 했다.

버스 노조, 철도 노조, 우체국 노조, 교사 노조는 모두 무바라크 타도 후 결성됐다.

그들은 날카로운 사회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집트 방방곡곡에서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많은 노동자가 한 달에 고작 40파운드(약 7만 5천 원)를 번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최소한 이것의 세 배가 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방방곡곡에서 노동자들은 작업장의 ‘꼬마 무바라크들’ — 옛 정권이 임명한 경영자들 — 을 쫓아내자고 요구한다. 이미 몇 곳에서 노동자들은 이 요구를 관철시키는 데 성공했다.

카이로를 방문한 영국 노동조합 대표단에게 한 이집트 보건의로 노동자는 어떻게 자기 병원에서 노동자들이 옛 사장에게 도전했고, 노동자들이 스스로 경영진을 선출한 후 정부에 이것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는지에 관해 말했다.

카이로에서는 희망과 자유의 냄새를



메이데이를 축하하며 타흐리르 광장을 행진하는 노동자들

맡을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 앞에는 만만치 않은 장애물이 놓여 있다.

무바라크는 쫓겨났지만 노동자들은 아직 가난하다. 또, 세계 경제 위기 때문에 이집트 민중은 국가의 보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공공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하다.

한 교사는 현재 자신이 학생 수가 90명인 학급을 가르치고 있지만 한때 1백 46명짜리 학급을 가르쳤다고 말했다!

군수품 공장(이집트 장군들이 운영하는)의 한 노동자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가장 기본적인 시민권을 얻기 위해 싸우고 있는지 말했다. 지금 파업을 벌이면 군사 법정에 회부될 수 있다.

이집트에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민주주의의 문제들이 있다.

군부가 여전히 나라를 통치하고 이집트 혁명의 급진적 세력들을 약화시키려 한다.

그러나 이집트 좌파 진영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민주노동자당

대단히 존경받는 활동가인 카말 칼릴이 당원인 민주노동자당도 메이데이 시위에 참가했다.

민주노동자당은 언론에 5만 파운드(약 9천5백만 원)를 지불하고 정당 창립 선언

을 해야 한다는 등 몇 가지 장애물들 때문에 아직 공식 정당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계급 기반 정당’ 금지 조처다. 물론 이 조처는 자본가 정당의 창당을 막지는 않는다. 노동자 조직 결성을 가로막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민주노동자당은 새로운 독립 노조의 핵심 활동가들의 관심을 모으면서 중요한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 노동자들이 주도하는 투쟁에 함께하고 싶어하는 농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고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적·정치적 요구를 제기하면서 이집트 혁명이 이집트 노

동자들에게 진정한 희망이 되려면 이 혁명이 더 심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중요한 정점은 이집트 국가가 강력한 버스 노조를 파괴하려 하는 것이다.

이 노조의 지도자인 알리 파투는 5월 7일 재판에서 파업을 선동한 것으로 판결이 나면 감옥에 수감될 위험에 처해 있다. 최대한 많은 사람이 지지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지지 메시지는 menasoliharity@gmail.com으로 보내면 된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번역: 김용욱

1백40일 파업 끝에 승리한 전주 버스 노동자들

복수노조 시대에 갈 길을 보여 준다

전주 시내 6개 버스업체 노동자들이 1백40여 일의 완강하고 끈질긴 파업 끝에 ‘민주노조 인정’이라는 소중한 성과를 거머쥐었다.

더구나 이번 파업은 “마침내 복수노조 시대가 활짝 열렸음을 만천하에 알렸다.”(〈새전북신문〉) 노동자들이 이제 “수십 년 쌓인 한”을 풀 수 있는 발판을 자주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번 투쟁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활동가들은 “(지역) 버스노동자들의 투쟁 가능성에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투쟁을 통해 전북 버스 노동자들은 전국적으로 버스노조의 민주화를 추동할 발화점을 만들어냈다.

“처음엔 이렇게 길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싸우면서 사측과 어용 한국노총만이 아니라 시의회, 전주 시, 전라북도, 그리고 노동부, 언론까지 한통속인 것을 보면서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뿐이 아니었다. 민주노조의 전국적 확산을 두려워한 이명박은 경찰병력 수천 명을 내려 보내 호조자본가들과 그와 결탁한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 그리고 민주당이 버티도록 지원했다.

그러나 파업투쟁에서 투사로 다시 태



전북 버스 노동자들처럼 싸워야 한다.

어난 조합원들은 이에 굴하지 않았다.

민주노총과 운수노조 지도부는 위력적인 연대투쟁을 조직해 투쟁 승리의 실질적 동력이 됐어야 했다.

또 대체 버스 투입 저지를 통해 투쟁의 효과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조직했어야 했다.

그랬다면 투쟁은 더 일찍 승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점들은 다소 부족했다.

그럼에도 1백40여 일이 넘도록 완강

하게 이탈하지 않은 조합원들의 투쟁이 저들(사주들과 그들과 뿌리 깊은 유착관계에 있는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과 정치인)을 더는 버티지 못하게 했다.

4·27 재보선을 이용해 민주당을 과감히 공격한 것도 큰 구실을 했다. ‘버스파업 해결과 공영제 실현을 위한 지역 시민사회 대책위’도 승리에 기여했다.

민주당은 부패와 무능이 드러나면서 이번 재보선에서는 전처럼 지지자들을 불러모으기 힘들었다. 진보신당 황정구 후보는 ‘전북 버스 파업 해결’을 내걸고 의미 있는 득표를 했는데, 사업권 환수와 공영제 실시까지 전면화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조합원들은 이제 시작일 뿐 해결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고 말한다. 함께 싸운 전북고속 노동자들은 아직 사측의 양보를 받아내지 못했다.

조합원들은 남은 전북고속 노동자들이 승리할 때까지 함께하고, 버스 업체들이 착복한 시 보조금 문제, 열악한 노동 조건과 체불 임금 등을 해결하기 위해 투쟁을 확대하며, 더 많은 노동자들을 민주노조로 획득해야 한다.

이병무

아랍 혁명 환경 문제 역사 이론 케지주제를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조명하는 연속 강연

해외 마르크스주의 학자 초청 강연

일시 : 5월 22일 (일) 11시 ~ 6시
장소 :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참가비 : 10,000원 (대학생 할인 8,000원)
주최 : 다함께
문의 : alltogether.or.kr | 02-2271-2395 | alltogether@alltogether.or.kr

11:00 ~ 12:50

아랍 혁명의 성격과 전망

제임스 엘린슨 에든버러대학교 강사, 국제정치 전공,
(히스토리컬 머터리얼리즘) 지 편집위원,
2008-09년 요르단대학교 연구원을 지냈다.

2:00 ~ 3:50

유럽 중심주의 비판

오언 밀러 런던대학교 아시아아프리카학대학과 버벡 대학 강사,
케임브리지대학교 연구교수,
조선 후기 사회·경제 역사를 전공했고, 한국 역사 기술 방법론을 연구한다.

4:10 ~ 6:00

경제 성장이 지구를 죽이는가?

개릿 데일 브루넬대학교 부교수(정치학·역사학), 기후정의운동가,
기후변화반대운동이라는 단체의 '백만 기후 일자리 촉각 창출하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 모든 강연은 영어-한국어 **순차 동역**이 제공됩니다.